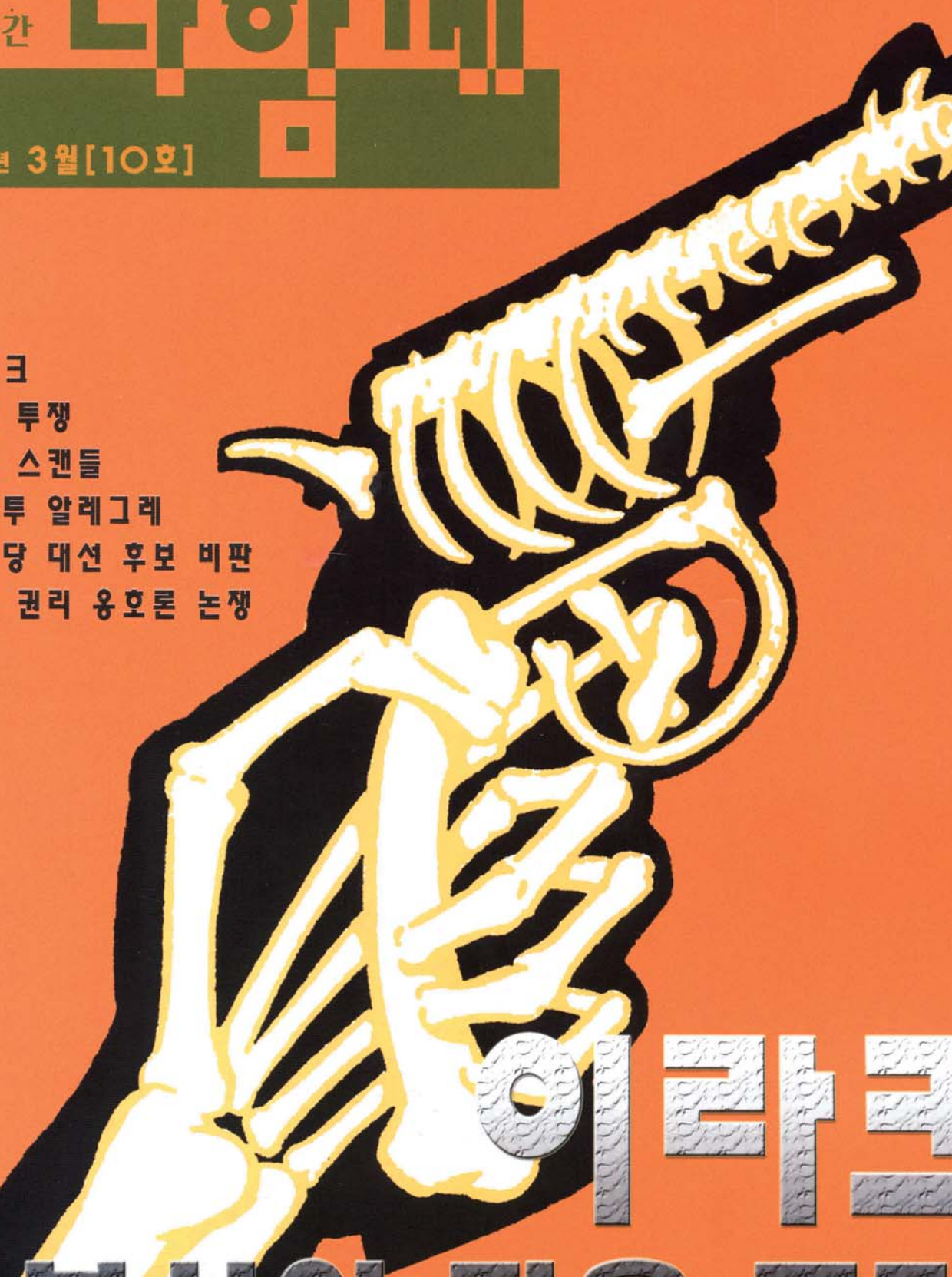


월간

다함께

2002년 3월 [10호]

- 이라크
- 철도 투쟁
- 엔론 스캔들
- 포르투 알레그레
- 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
- 동물 권리 옹호론 논쟁



이라크 부시의 다음 표적

한총련 소속의 한 학생이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위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미국 반대, 전쟁 반대”를 외쳤다.
경찰은 이 시위에 참가한
20여 명의 학생들을 모두 연행했다.
지금은 다함께 반미 반전 운동을 건설할 때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1월 말에 부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고 협박했다. 바로 그 무렵 두 개의 포럼이 동시에 열렸다 —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사회포럼(WSF).

두 포럼은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뉴욕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기업체 사장들과 정부 지도자들의 사교 클럽이다.

뉴욕의 거리에서는 2만 명이 모여 세계경제포럼에 항의했다. 뉴욕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저항권을 되찾았다. 뉴욕은 9월 11일 테러가 발생했던 곳이다. 미국 언론들은 항의 행진을 조직한 단체인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를 비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부시의 전쟁과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에 반대해 거리 행진을 했다.

시위대는 부시와 엔론의 부패한 밀월 관계를 비난했다. 그들은 "저들은 엔론, 우리는 아르헨티나인"이라고 외쳤다. 엔론의 파산은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가 뻗속 깊이 썩어 있음을 보여 줬다. 그 동안 미국 지배자들은 한국의 경제 위기가 "정실 자본주의"에서 비롯했다고 말해 왔다. 엔론 스캔들은 정실 자본주의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징임을 드러냈다.

한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세계사회포럼이 열렸다. 7만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1만 5천~2만 명이 참가했다. 1년 사이에 참가자 수가 3~4배 늘어났다. 포르투 알레그레는 9월 11일 테러 이후 조직된 첫번째 국제 규모의 반자본주의 운동이었다.

세계사회포럼이 열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2천 명의 아르헨티나인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했다. 한때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 경제 모델의 수제자로 칭송받았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결국 지난해 12월에 반란을 불렀다.

포르투 알레그레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던졌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세계를 원하는가?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인가?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반란인가?

포럼에 참가한 상이한 세력들을 반영하는 여러 논쟁들이 벌어졌다. 전쟁과 세계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반자본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인 수전 조지와 월든 벨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에게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반전·반군국주의 투쟁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세계사회포럼은 미국의 군사 침공,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확전 계획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확고하게 움켜쥐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중 운동을 분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판단이 큰 도박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내일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9퍼센트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비난했다.

친미주의자답게 김대중은 대중적 반미 감정을 두려워 한다. 그는 "반미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미 투쟁을 강경하게 단속하겠다는 경고다. 따라서 반미 투쟁은 김대중에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와 작업장과 대학에서 그리고 선거에서 김대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4 저들의 세상 우리의 세상

특집1

- 8 미친 듯이 질주하는 전쟁광들
- 11 이라크, 미국의 다음 표적
- 13 1991년 제2차 걸프 전쟁
- 16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특집2

- 18 김대중, 부패, 위기
- 20 민주당 대선 후보 폭로
- 24 교사 노동자가 민주노동당 지지 이유를 말한다
- 26 한미 투자 협정 -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적 공격
- 28 교육 평준화 해제 논란
- 30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동자들
- 32 피에르 부르디외와 조사
- 34 동물 권리 옹호론에 대한 재반론
- 36 과학과 이데올로기
- 38 [여성 칼럼] 세계화와 여성 노동자
- 40 [저항의 세계화]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격동의 세계

- 42 엔론 스캔들
- 44 아르헨티나 노동자 저항
- 46 빅토르 위고 탄생 200주년

47 영화평

50 시평

"다함께"에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5-4773 / Fax : 02-968-5907
E-mail : altogether2002@yco.co.kr
http://altogether.jinbo.net

독자편지, 투쟁소식/보고 등을 보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3월 13일입니다.
E-mail: altogether@orgio.net

미국이야말로 강패 국가

탈레반 정권을 억압적이라고 비난했던 미국 지배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곳은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기지다. 수용된 포로들의 수는 모두 1백58명이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전쟁 포로들은 이송 과정에서부터 짐승 취급을 받았다. 총기로 무장한 보안 경비원들이 이들을 쇠사슬로 묶어 비행기에 태웠다.

포로들이 수감된 곳은 ‘캠프 엑스레이’ 수용소다. 이 곳에서 포로들은 가로 1.8미터, 세로 2.4미터 크기의 독방에 갇혀 있다.

포로들은 마치 새장에 갇힌 앵무새처럼 24시간 내내 감시당한다. 미국은 이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포로들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 귀, 입을 가린 채 족쇄와 수갑을 차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인권 단체들은 포로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일부 영국 언론은 포로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을 ‘전쟁 포로’가 아닌 ‘불법적 전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부시가 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다.

부시 정부는 국제적 비난 여론에 직면한 뒤에야 탈레반 병사들에게만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알카에다는 “국제 테러조직이고 협약의 국가 당사자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을 전쟁 포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 4조 1항은 “민병대 또는 자원군의 구성원을 포함해 분쟁 중 한쪽 당사자의 무장병력에 소속한 사람”을 전쟁 포로로 명시해 놓았다. 알카에다 대원들을 전쟁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협정 위반이다.

이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받을 경

우 수용 조건 개선, 재판 거부, 답변 강요 금지,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전쟁이 끝나면 석방될 수도 있다.

반면, 알카에다 대원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군사 재판을 통해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검찰은 미국 출생 탈레반 전사 존 워커 린드의 보석심을 기각했다. 그가 부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다.

한상원

변협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다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테러방지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고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며 테러방

지법을 반대해 왔다. 변협의 테러방지법 반대 입장 표명은 김대중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 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테러방지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2월 15일 민주당 원내총무 이상수는 테러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 총무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없는 자들이 반민주악법에는 손발이 척척 맞았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계엄령 없는 계엄 상태”가 선포될 수도 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이용해公安정국을 조성하고 노동자·민중 운동을 공격하고 싶어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법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테러방지법을 반대해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이 나설 필요가 있다.

김덕엽

이주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지난 1월 23일 오후 경기도 포천군 아모르 가구 공장에서는 “노 페이, 노 워크”(No Pay, No Work)란 구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1백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1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아모르 가구 노동자들은 오전 8시 30분에 조업을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무려 16.5시간을 일했다. 그 대가는 겨우 1백만 원이 조금 넘었다. 쉬는 날이라곤 본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월급 다음 날 하루뿐이었다.

사장은 그나마 월급마저 제때 주지 않고 체불하기 일쑤였고,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뺨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란인 노동자를 샴소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난방도 안 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작은 전기 난로 하나에 의지해 잠을 잤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관리자들이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켠 적도 있었다. 살

인적인 장시간 노동 때문에 빈번하게 산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체불되자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사장은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심지어 러시아 마피아(인력 송출업체)들은 지게차로 배를 찢러 버리겠다고 파업 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된 파업 투쟁에 밀려 사장은 결국 4일 만에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

이번 파업은 이주 노동자들의 최초 일정 규모 파업이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숫자는 3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등록 노동자가 약 22만 명이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데만 관심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말뿐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누구에게 얻어맞거나, 일하다 다치거나, 월급을 못 받아도 울지도 못한다. 큰 소리로 울었다가는 ‘불법 체류자’로 잡혀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원재

징집제를 모병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던 병역법이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경수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관례를 깬 남부지원의 판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지난 반세기가 넘게 논의조차 금지돼 왔던 병역 거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의 태도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2월 8일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의 중심 인물인 오태양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은 길길이 날뛰었다. 병무청과 우익들은 인기 연예인 유승준의 병역 기피 문제가 부각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의 의무는 신성불가침한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위선이다.

박노항의 파렴치한 부패 행각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병무청은 병역 비리의 온상이다. 권력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쉽사리 빠져 나갈 수 있다. 이회창의 아들은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사장은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김



용갑의 아들도 아버지의 반공 투사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다.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뼈빠지게 고생하는 것은 대부분 노동자·서민의 자식들이다. 이들은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해 26개월 동안 병역 의무를 강요당한다.

우익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고 말한다. 무심코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뱉었다.

우익들은 양심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면 군대를 가기 싫은 젊은이들이 종교와 양심을

방패 삼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거라는 게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억지로 군대에 집어넣는 징집제가 문제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70퍼센트의 사람들이 지원제로 바꾸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군 입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병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군 입대 여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강철구

경찰, 포주 그리고 비극적 죽음

지난 1월 29일 군산시 개북동 유홍주점 '대가'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윤락 여성들이 숨졌다.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유홍주점 화재 사건으로 4명의 윤락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반도 안 됐다. 이번에도 매춘 여성들을 감금하는 바람에 끔찍한 참사가 생겼다. 불길에 놀라 켜 여성들이 대피하려 했지만, 1층 현관문과 철문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이들 모두 오도가도 못하고 뒤엉켜 끔찍하게 죽었다. 숨진 여성들은 하나같이 지독하게 가난하고 불우한 형편에서 살다 이 곳으로 끌려왔다. 그들의 일기장에는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다."고 써어 있었다.

경찰은 숨진 여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고 쇠창살이 없어 감금한 흔적은 없다." 군산시장, 군산경찰서장, 군산소방서장은 재빨리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종업원들이 침착하게 창문과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했다더라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사 유종근은 "윤락녀들이 취중이라도 비상탈출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비상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마지못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대책위가 제기한 후에야 현관 문에 설치된 특수 잠금 장치나 포주가 여성들에게 받은 현금 보관



각서(노예 문서)를 공개했다.

전북경찰청은 뒤늦게 "인신매매와 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명동 화재 사건 때나 이번 화재 사건 모두에서 경찰이 포주와 끈

끈하게 유착돼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에게 정기적인 뇌물과 성상납까지 받으며 노예 매춘을 눈감아 주었다. 이번에 불이 난 '대가'는 파출소와 3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조승희

반전 비디오 테이프 "잘려나간 평화, 데이지 커터"

스튜디오 아이스크림(studioiscream) 제작

영상물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02-964-3736(회기동 공동작업실), 017-624-5222(이훈균),

016-229-0490(김학균), webmaster@studioiscream.com으로 연락주시시오.

▷ "잘려나간 평화, 데이지 커터"와 "더이상 더는"이 함께 담긴 비디오테이프 1매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단, 10매 이상 구입할 시에는 1매당 12,000원에 드립니다.)

마친 듯이 질주하는 전쟁광들

김인식

끝없는 전쟁. 이것이 조지 W 부시가 바라는 것이다. 1월 29일 국정 연설에서 부시는 이렇게 경고했다. “지금 수천 명의 위험한 킬러들이 살인 방법을 배워 재깍거리는 시한 폭탄처럼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흔히 상습적인 범죄 국가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뒤이어 부시는 그 “어디”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 북한·이란·이라크. 그는 이들 국가를 “악의 축”이라고 불렀다. 이 세 나라의 상호 관련성은 분명치 않다. “축”(axis)이라는 단어는 제2차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사용했던 것(이른바 추축국)이다.

부시의 메시지는 명백하다. 즉,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 만다는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국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나라들은 죄다 짓밟고 싶어한다.

부시는 국정 연설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언급하지 않았다. 빈 라덴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시가 그토록 “사살하거나 생포하고” 싶어했던 인물이다. 알카에다 조직도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라크·이란·북한으로 이뤄진 “악의 축”을 끄집어 냈다.

미국의 전쟁광들은 부시의 연설에 재빨리 호응했다.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이란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고 이란 정부를 비난했다.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은 북한을 공격 대상에 올려 놓았다. 이유는 북한이 미 사일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북한보다 454배나 많다.(미국 중앙정보국은 북한의 연간 미사일 수출액을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전 주한 미 대사였던 제임스 릴리도 파월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특히 미국인들을 대할 때 그렇다.” 하고 말했다.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사실, 9월 11일 테러 직후부터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와 전면전을 벌일 구실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부시의 전쟁 물이는 초당적 합의를 끌어 냈다. 코네티컷 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지프 리버먼은 이라크를 끔찍하게 증오한다. 그는 최근에 “바그다드의 사담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는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2월 4일에는 미국과 영국 전투기들이 이라크 북부의 방공망을 맹폭격했다. 9·11 테러 이후 이라크에 대한 첫 폭격이었다.

“악의 근원”

미국은 세계 제일의 무기 수출국이다. 그런 미국이 어떻게 이라크 같은 나라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시가 선포하겠다는 “악의 근원”은 바로 미국 정부에 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에 대한 경제 봉쇄를 단행해 5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였다.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넌센스다. 미국의 군비는 세 나라의 국민총생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나 부시는 이런 사실에는 아무 관심 없다. 그는 오로지 전쟁의 북소리를 울리는 것에만 관심 있다. 지금 부시 정부는 전쟁 준비에 요란법석을 떨고 있다. 미국 정부는 1천만 달러(1천3백억 원)짜리 TV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광고는 테러리즘과 마약 복용이 서로 관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 판매 수익이 결국 테러 집단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 나라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옛 소련

이 붕괴하자 미국은 냉전 시대의 군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미국 국방부는 다음의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 군대는 “깡패 국가들”, 즉 북한·이란·이라크에 맞서 두 전장에서 동시에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9월 11일 테러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미국은 “원원 전략”을 포기했다. 그러나, 좀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두 군데의 전쟁 자체를 포기했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광범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수정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 축”이나 “테러와의 전쟁” 같은 부시의 언사들은 항구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9월 11일 테러 훨씬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부시 정부는 국방 예산을 지난 해보다 480억 달러(62조 4천억 원)나 더 늘렸다.(올해 미국 국방 예산은 3900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514조 8천억 원이다.) 부시는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 한다. 먼저 직업 훈련과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위한 기금은 대폭 삭감됐다.

부시는 “승리”에 도취돼 있는 듯이 보인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해방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메스껍게도 부시와 토니 블레어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4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2월 중순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대한 폭격을 재개했다.

아프가니스탄 과도 정부는 잔혹한 지방 군벌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미국 기업주들의 신문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이렇게 보도했다. “잘랄라바드, 칸다하르, 마자르-이-샤리프 같은 주요 도시들은 지금 군벌들과 증무장한 민병대원들의 기지가 됐다. 군벌들의 검문소들이 나라 전체를 갈라놓았다.”

10년 전의 내전이 다시 시작됐다. 카불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부시가 말한 전쟁의 목적은 성취되지 않았다.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지도 못했고 죽이지도 못했다. 전쟁은 그 지역에서 더 큰 불안정을 낳았을 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을 자극해,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전쟁 위기가 고조돼 있다.

미국은 이미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고 추정되는 조직들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 고문단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필리핀 군대가 아부 사야프(이슬람주의 게릴라 단체)를 공격하는 것을 돕기 위

해서다.

미국은 3만 명의 M16 소총, 8대의 헬리콥터, 해안 경비정, 650명의 요원들, 1억 달러(1300억 원)를 필리핀 군대에 보냈다. 이 모든 것은 1백 명도 안 되는 아부 사야프를 사냥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동남 아시아에서 예전의 지위를 되찾고 싶어 한다. 10년 전에 미국은 수백 만의 해군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를 필리핀에 넘겨 줬다. 이제 미국은 그 지역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 되면 이 지역에서 경제적 ·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분열의 목소리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고 말했다. 2월 초에 부시는 1991년 걸프 전쟁 이래 최대 규모 해군 동원을 명령했다. 부시의 함대는 언제든지 예멘 · 소말리아 ·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가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자,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들조차 이를 비난했다. “워싱턴이 억류한 관타나모의 아프가니스탄 포로,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부시의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해 유럽연합(EU) 15개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세계 유일 강대국을 비판하고 있다.”(<파이낸셜 타임스>, 2002년 2월 12일치.) 독일 외무부 차관은 “우리 유럽인들은 이라크와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에 대해 경고한다” 하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라크가 테러에 연루돼 있다는 정표나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도 부시의 전쟁 대상 목록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영국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영국 외무부 장관이 이란을 공식 방문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시의 발언은 미국이 지금부터 이란을 이라크와 똑같이 다루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위험하면서도 확고하지 않은 증거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유럽 정부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힐 것이다.” 하고 논평했다.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정책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독주를 비판했다.

더욱이 “유럽인들은 — 특히 프랑스는 — 워싱턴이 제출한 역할 분담에 심한 거부 반응(이해할 만한)을 보일 것이다. 미국은 싸우고 유엔은 격려하고 유럽연합은 뒷돈을 대는 세계 전망에 불편한 심기를 느낄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 2월 11일치.)

한편, 부시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 노릇을 했던 중국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비판했다.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이란 · 이라크 · 북한[에 대한] ... ‘악의 축’이라는 낙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심각한 모순에 빠졌다. 김대중은 미국과 한나라당의 호전적 압력 —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 — 과, 아래로부터의 거센 반미 정서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김대중은 이번에도 대중 운동을 단속하는 식으로 미국과 한나라당의 압력에 타협하고 있다. 그는 “반미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다시반전 운동을 건설할 때

미국의 다음 공격 대상은 이라크가 될 것 같다. 미국은 애초에 세 나라를 한 묶음으로 언급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라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시간 문제인 듯 보인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2월 초 뮌헨에서 열렸던 나토 국제안보정책회의에 항의해 1만 명이 모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평화운동가들과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반군국주의 시위를 준비했다. 바이에른 주 정부는 행진을 금지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주 정부의 금지 명령을 거부했다. 경찰의 가혹한 탄압을 뚫고 나토 회의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7만 명이 모여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뉴욕에서도 2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부시는 “자유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9월 11일 이후 부시와 그의 ‘악의 축’ — 딕 체니, 존 애슈크로프트, 도널드 럼즈펠드 등 — 은 세계 민중의 자유를 유린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폭격하고 굶주리게 만들었다. 알카에다 포로들을 야만적인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에 가둬다.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과 이민자들을 공격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려는 미국의 위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이 반전 운동에 참가해야 한다. 

이라크

미국의 다음 표적

이수현

2월 1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이 올 하반기에 이라크를 공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또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20만 명의 미군이 동원될 것이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전쟁 계획서를 부시에게 이미 전달했다.

미국 국방장관 럼즈펠드의 수석보좌관인 리처드 필은 이라크가 무기 사찰을 허용하더라도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가당치 않게도 “비둘기 파”라고 불리는 콜린 파월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9·11 테러 직후부터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전직 CIA 국장 제임스 울시는 9·11 테러 용의자인 알카에다 조직원과 이라크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가 프라하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시가 증인으로 내세운 체코 관리는 이를 부인했다. 심지어 미국의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영국 정부조차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했다.

또, 탄저균 편지 소동이 일어나자 부시는 이를 이라크와 연관시키려 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그 탄저균의 출처가 바로 미국 군부 자신이었음을 시인해야 했다.

그러자 국방부 부장관 폴 울포워츠는 아예 증거 따위는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우리[미국]를 파괴하고 싶어하고 인접국들을 테러로 위협하는 이 정권[후세인 정권]을 타도할 필요가 있다. 그[후세인]와 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짓”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매파”인 울포워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앨 고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상원의원 조지프 리버먼도 “후세인 정권이

타도되기 전에는” 대테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운 히틀러”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이 한때는 미국의 동맹 세력이었듯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도 1990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맹방이었다.

약 1백만 명이 사망한 1980~1988년의 제1차 걸프전(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무기를 팔아먹었다. 그러다가 이란이 승리할 조짐이 보이자 재빨리 이라크를 편들었다. 미국의 경비전 팔레비 왕정을 타도하고 들어선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이 승리하도록 놔둘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미국은 후세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1988년에 후세인이 이라크 내 쿠르드족 5천 명을 독가스로 살해했을 때 이를 비난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오히려 그 두 달 뒤에 미국의 벡텔 사는 이라크에서 겨자가스(겨자처럼 매운 가스로 1차대전 때 독일이 처음 사용한 독가스)와 기화폭탄을 생산할 석유화학 공장 건설 계약을 따냈다.

미국의 지원 덕에 제1차 걸프전에서 승리한 후세인은 기고만장해졌다. 후세인은 미국의 후원을 과신한 나머지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이는 후세인의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 쿠웨이트 침공 4개월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대표단은 후세인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은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신임을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후세인을 악마로 만들기 시작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에게는 “악의 제국” 소련을 대신할 새로운 악마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후세인을 “새로운 히틀러”라고 규정했다.

후세인이 유엔 결의안에 따라 쿠웨이트에서 철수한

다는 데 동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1월, 쿠웨이트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쿠웨이트에는 지킬 만한 민주주의가 없었다. 한 달 반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 8만 8천5백 톤의 폭탄을 퍼부었다.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죽었고 국토는 초토화돼 “석기 시대로 되돌아갔다.”

경제 제재

걸프전이 끝난 공식 시점은 1991년 2월 말이었다. 그러나 훨씬 더 치명적인 전쟁(경제 제재)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경제 제재로 그 동안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하루에 약 2백 명씩 죽어 간다.

이라크 군부가 “이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은 모두 수입 금지 대상이 됐다. 수돗물 정화에 필요한 염소, 앰블런스 연필, 비료, 살충제, 수도 펌프… 그 목록은 끝이 없다. 그 때문에 이라크 사람들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그냥 죽어야 한다.

유엔이 이라크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는, 식량 수입을 위한 석유 수출 프로그램은 이라크가 석유 수입의 3분의 2만 ‘인도주의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부패

한 쿠웨이트 왕가와 서방 석유회사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물론 유엔의 “경비”를 충당하는 데에도 쓰인다.

최근에 기밀 해제된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문서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가 낳을 결과들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1991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라크의 수돗물 정화 작업은 특수 설비와 화학 약품의 수입에 달려 있다. …설비와 약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 대다수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염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미국의 하원의원 70명도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쓸 정도였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9년 넘게 계속됐지만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몰아내거나 국제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경제와 국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격

제2차 걸프전이 끝나자 미국은 이라크 북부와 남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이라크의 비행기는 물론 헬리콥터조차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후세인의 억압을 받는 북부의 쿠르드족과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들을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로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이 죽거나 고통 받고 있다.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상의 이유다.

그 뒤 미국과 영국의 비행기들은 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수시로 폭격을 가했다. <윌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라크 북부 [와 남부]의 ‘비행 금지 구역’을 8년 간 운용한 끝에 이제 군사 목표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전투기의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의 41퍼센트는 이라크 민간인들이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모두 1천5백 명에 가까운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했다. 1천3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작년 6월 19일 텔 아페르 축구장에 대한 폭격으로 23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은 17세 이하의 청소년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런 폭격이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들은 비행 금지 구역을 순찰하다가도 터키 공군이 이라크 내의 쿠르드족을 폭격하려 하면 제발리 귀대해야 한다. 쿠르드족을 폭격하려는 터키 공군을 위해 길을 비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투기 조종사들조차 분노를 터뜨린다.

2000년 12월 말에는 1만 명 이상의 터키군이 이라크 북부를 침공해 수많은 민간인과 쿠르드 노동자당(PKK) 투사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쿠르드족을 “보호”한다던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들은 이를 전혀 저지하지 않았다.

가능성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했다. 부시가 “악의 축” 이라크를 “대테러 전쟁”의 2단계 표적으로 결정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이제 시간 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미국과 이라크의 3차 걸프전은 11년 전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년 전과는 달

리, 오늘날에는 대중적 반자본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이 존재한다. 부시는 미국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더 큰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후세인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석유를 판매한 돈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이란 등과 관계를 개선해 왔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무장조직 대원들이 사망하면 그 유족들의 뒤를 봐 주었다. 2차 걸프전 때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경험에서 나름대로 배운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던 아랍연맹이 “악의 축” 발언을 비난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우리가 보기에 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목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중동 민중 속에서 널리 퍼진 반미·반이스라엘 정서가 미국의 전쟁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9·11 테러 자체가 아랍 민중의 반미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민중봉기(인티파다)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승리는 중동의 피억압 민중 속에서 반미 감정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더해진다면 부패하고 무능한 아랍 정권들은 미국과 자국 민중 사이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불만을 흡수할 만한 정치·사회적 장치가 거의 없는 나라들에서는 급작스런 반란과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는 과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11년 전 걸프전쟁을 돌아본다

김하영

죽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현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아버지)가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고 일본·독일 등 다른 서방 열강들에 미국의 맹주권을 확인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다.

1991년 1~2월 제2차 걸프(이전에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렀다) 전쟁은 어린이를 포함한 2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미국 정부는 그 때도 민주주의를 얘기했다. 그러나 쿠웨이트(사담 후세인은 1990년 8월 2일 그 동안 유가 인상 폭을 두고 다투 온 쿠웨이트를 점령했다.)에는 미국이 수호할 민주주의가 아예 없었다. 알사

바 왕가의 전제는 끔찍했다. 미국의 걸프 지역 최대 동맹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의 전제역시 지독했다.

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부시의 미사여구와 달리, 2차 걸프 전쟁의 근원은 세계 체제 자체의 성격에서 찾아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몇십 년 동안 미·소 양대 초강대국을 두 축으로 일정한 세력균형이 이뤄졌다. 미국과 소련은 자기를 자신의 세력권을 지배할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 열강들인 독일과 일본은 냉전 초기에 미국의 맞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바뀐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났다. 두 초강대국간 양극 구도는 해체되고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다극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듯했고, 그와 함께 체제의 상대적 안정성도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가장 주요한 열강으로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해 온 경제 사이에 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걸프에서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긴장이 최초로 발생한 1990년 8월 초순 이후 전쟁 종결 때까지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손을 벌려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을 구했다. 단연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서 미국은 걸프 전쟁을 통해 다른 열강들에 자신의 맹주권을 확인시키려 했다.

부시는 처음부터 강력한 듯했다. 당사 오펜과 고르바초프¹⁾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 뒤 UN을 쥐고 흔들었으며, 그리하여 오랫동안 안보리 국가들의 행동 통일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획득했고, 다른 강대국 지도자들을 마치 턱으로 부리는 듯했다. 그것도 유럽에서 세력관계 재편 — 특히 통일 독일과 소련 사이의 밀착 — 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던 때에 그랬던 것이다. 부시는 “베트남 증후군”을 차체에 확실히 없애 버리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사실, 미국은 1983년의 그레나다 침

공과 1987년의 이란·이라크 전쟁(제1차 걸프 전쟁) 개입 등과 같은 계기들을 통해서 조금씩 베트남 증후군을 극복해 왔다.

그러나, 걸프 전쟁의 비용은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도 어마어마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긴장 발생 전에 겪기 시작한 경제 불황은 심각했으므로, 전쟁을 오래 끈다면 그에 필요한 군비 지출에 재원을 대기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 빈부격차와 실질임금 인하를 가져왔던 레이건 시대에 대한 증오, 그리고 전쟁의 진정한 이유가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가치들이 아니라 석유라는 사실이 드러나 전쟁 발발 전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반전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한국 정부

1990년 9월 노태우는 3억 5천만 달러의 주둔분담금 지원을 요구한 부시에게 2억 2천만 달러만 내놓겠다면서, 그 대신 군 의료진을 파병²⁾하겠다고(즉, 돈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고) 그 스스로 제안했다.

1991년 1월 12일 노태우는 전투병력 파병을 “이 시간 현재 요청받은 바도 없고 현재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래에는 거론해서 파병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바로 그 날 부시는 애초에 요구했던 3억 5천만 달러를 그대로 지원하라고, 즉 1억 3천만 달러를 더 내놓으라고 채근했다. 그 즉시 노태우는 걸프 주변국에 9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정했고, 국방부는 전투부대 파병 문제를 “앞으로 만약 사태가 악화되어 유엔 참전국에서 파병을 강력히 요청할 때에는 안보 및 국익에 대한 손익을 판단해 검토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가 군 의료진 선발대를

“현지조사단” 명목으로 먼저 보낸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였는데도 부르주아 입헌주의에 충실하다는 김대중의 평민당은 “융통성을 발휘”했다. 집권당인 민자당의 “지자체 예정대로 실시” 약속에 보답하기 위해 평민당은 1월 21일 국회에서 군 의료진 파병 동의안 통과를 놓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정부에 협조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왜 중동에 파병함으로써 “미국이 취한 결연한 군사적 조치를 전폭 지지”했는가?

첫째, 걸프 전쟁은 무엇보다 석유 전쟁이다. 국내 산업체들의 원료와 동력이 되는 수입 석유의 거의 75퍼센트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이 석유 공급과 석유 가격에 대한 지배를 위해 벌이는 도박에 어떻게든 한몫 끼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 미국이 판돈을 거둬 갈 때 자기는 개표도 못 얻어 가는 사태를 한국 정부는 우려했던 것이다. 걸프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면, 한국 정부는 좋은 조건으로 원유를 구매할 수 있다. 중동 정권들에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 —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그리고 확실히 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둘째, 언젠가는 현실화될지도 모를 북한 국가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남한 권력자 집단(“기성 체제”)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북한 판료에 대한 효과적인 위협으로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격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남한 권력자 집단 전체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충실히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 결정”은 “미국의 요청” 또는 “강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대적 독자성일 뿐이다. 이 사실은 다음의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조세형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의 계수소위에서 걸프 주둔분담금 문제를 놓고 여당인 민자당 측에 시비를 걸고 있었다. 민자당 측은 주한 미대사 그레그가 외무부에 보내는 서한을 보였다고. 그 서한은 주둔분담금 동의안 국회 통과를 성사시키라고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평민당은 썩 소리 안 하고 통과시켰다.

이보다 훨씬 전인 월남 파병 당시 제1야당 민정당의 윤보선은 “[파병이] 한국 측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대하고 미국측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찬성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공화당이 박정희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답변해 민정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다음에는 미국 대사관이 그렇지 않다고 이실직고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번복했다!

남한 권력자 집단 전체가 국내 노동자 계급에 맞서 그리고 북한 관료에 맞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미군의 남한 주둔을 미국의 의사라는 한쪽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전체적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 남한 권력자 집단 전체가 미군 주둔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차 걸프전을 앞두고 미국 측이 주한미군 걸프 전환배치를 입에 올렸을 때 그들은 남한 권력자 집단 전체에 만약 전투병력 걸프 파병을 찬성하지 않으면 미군을 빼내가겠다고 위협한 것이었다. 그만큼 남한 권력자 집단 전체에 미국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다.

제국주의적 걸프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 무엇보다 이라크 민중과 아랍인들의 처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서방과 자국 정부에 대한 제3세계 민중의 투쟁도 수세에 몰릴 것이었다. 그들 피억압 민중과 민족주의 지도자들(후세인 같은) 사이도 더욱 유착될 것이었다. 소련내 소수민족들의 저항도 러시아 제국주의의 더한층의 억압

에 부딪힐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거의 때를 맞춰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민중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1995년부터 서유럽 노동자 투쟁이 부활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세계 자

본주의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노동자 운동에 바탕을 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다시금 이라크(또는 소말리아나 예멘)를 희생시켜 자신의 맹주권을 다른 열강들에 확인시키려 할지도 모르는 지금, 학생·노동운동가들이 곱씹어 봐야 할 교훈이다. 

1)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태우 정부로부터 30억 달러를 뜯어 내고 심지어는 쿠웨이트 망명 정부로부터도 10억 달러를 뜯어 낸 당시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걸프에서의 비극적 전쟁은 국제 사회의 철군 요청을 이라크 지도부가 거부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라며 반이라크 진영에서 뜯어 낸 데 대한 보답으로 부시의 편을 들었다. 그 얼마 전부터 고르바초프는 야코블레프·아말긴 등의 개혁파를 견제하며 권위주의 독재로 회귀하기 위해 수구파와 제휴하기 시작했다. 그러기 전에도 그는 소련내 민족 문제에 관한 한 철저히 러시아 제국주의자로 행동했다. 1990년 초 미국이 한때 자신의 충성스런 하수인이었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의 배반을 응징하기

위해 파나미를 침공해 7천여 파나마 민중을 학살했던 때와 비슷한 때 아제르바이잔 민중을 탱크로 짓밟았던 고르바초프는 이번에도 미국이 역시 한때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후세인의 반역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를 부리려 할 때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를 유린했다(고르바초프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 대한 군대 투입이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며 심지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의 위선과 잔꾀를 부렸다.’) 이미 1956년에도 소련의 지도자(흐루시초프)는 영국과 프랑스가 나세르 치하 이집트를 유린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탱크를 보내 헝가리의 혁명적 노동자 평의회를 분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은 그럴 때마다 러

시아 제국주의자들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둘은 자기들끼리는 으르렁거렸지만 피억압 민족의 해방 운동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고르바초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경비견이다. 그 국가는 아랍 세계라는 피억압 민족의 바다에 떠있는 ‘아류 제국주의’ 고립소국이다. 그렇다면 아랍 민중이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 2) 아무리 의료진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군인이며 따라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파병 행위임은 노태우 정부의 국방부 관계자 자신이 분명히 인정한 바였다.



미국은 머지않아 이라크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정보국장 조지 테넷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이미 결정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는가? 미국은 중동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랍 민중은 어떻게 미국에 저항했는가?

이 소책자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이정구

미국 지배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승리를 미국의 권력에는 걸림돌이 없다는 증거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경제적·정치적 약점과 결합해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조지 W 부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첫번째 국면일 뿐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신의 헤게모니를 천명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상대인 아프가니스탄을 골랐다. 인구, 국가의 부, 산업 발전,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힘의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난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아마 소말리아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이미 황폐해 있어 공격하기 적합한 대상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힘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고 싶어한다. 1989년 냉전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이전의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예컨대 미국의 군사비는 서방 전체 군사비의 36 퍼센트를 차지했다. 하지만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낙관주의는 몇 가지 약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방 열강들 내에서 미국이 차지했던 우위는 냉전 시기에 못 미친다. 유럽연합(EU)의 총산출량은 미국과 비슷해졌으며, 일본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1990년대 내내 국제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둘째는 미국의 성장을 자체도 예전만 못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제한적 호황은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려 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의 취약한 측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엔론사의 파산은 단적인 예다.

셋째,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사회의 불안정이 증대했다. 1990년대에 미국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분열과 갈등

넷째, 제국주의 강대국들 사이의 틈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동맹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했다. 탈레반 붕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치 세력들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 전리품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군벌들은 언제라도 내전에 돌입할 태세다. 중앙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근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중앙 아시아에서 미국이 독주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시가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유럽의 동맹국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시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동맹국들의 견제와 반발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악의 축을 물리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킬 것이다.”

미국은 1991년 제2차 걸프전에서 유엔의 외피를 쓰고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1999년 발칸 전쟁 때는 나토의 깃발 아래 군사 행동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는 동맹국들의 지원과 결속력이 전보다 훨씬 더 약화됐다.

미국은 제3세계와 서방의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각인시키려 한다. 그러나



노동 운동이 적극 참여할 때만 부시의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우방국들로부터 더 많은 견제와 갈등,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다섯째, 서방 세계에서 미국과 우방국들 사이의 동맹은 매우 불안정하다. 제3세계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또한 미국 패권주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동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은 제국주의, 특히 미국에 대한 반감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 때문에 미국에 대한 중동 민중의 반감은 더욱 증대했다. 제2차 걸프전 이후 중동 주둔 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중동 국가의 —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후원했던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의 — 지배자들은 민중의 반미 감정 때문에 초긴장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도 제3세계에서는 불안정과 갈등,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리엘 샤론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전시 상태에 처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 직전 상황이다. 미국이 콜롬비아에서 벌이는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를 다시 내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체첸 분리주의자들을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을 용인받았다. 중국도 중앙 아시아의 신장 · 위구르 자치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조지 W 부시는 미국의 힘에 굴종하는 세계를 바란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미국의 전쟁광들은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수 없다는 점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쉽사리 공격 대상을 정하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다.

조지 W 부시가 소말리아나 이라크를 다음 표적으로 고른다 할지라도 서방 우방국들과의 갈등과 제3세계에서 증대되고 있는 반미 분위기 때문에 사태가 그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만약 대중적 저항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베트남 신드롬은 부활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때와는 달리 즉각 대중적인 반전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 가능성을 보여 준다.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전 세계 민중의 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 한 나라를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결코 무적의 국가가 아니다. 

이보다 더 더러울 수는 없다

김여진

2000년 5월 이용호가 하룻만에 석방된 후 두 번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부패에 연루된 자들의 거짓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만난 적 없다”, “누군지 모른다”, “금시초문이다”, “사실이면 할복 자살하겠다” 등의 잡아떼기는 며칠도 못 가 “나는 입이 없다”는 가련한 말로 바뀌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하던 김대중의 처조카 이형택은 황당한 보물선 사업에 국가 기구들을 줄줄이 동원했다. 청와대·국정원·검찰·국방부·해군·해경 등이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제2의 이원조”라 불린 이형택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충정”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는 보물선 발굴이 가망 없음을 알고도 엄청난 주식 이득을 약속받고는 이용호한테 보물 발굴 사업을 또다시 주선했다.

“검찰은 절대 잘못이 없다”, “자식도 어찌 못하는 데 동생을 어찌하랴”던 전 검찰총장 신승남이 검찰 수사 축소·은폐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의 아들들까지 부패에 연루됐다. 김홍일은 이용호의 로비스트와 향응성 휴가를 떠났고, 이용호측이 검찰 간부들에게 돌린 돈봉투에는 김대중의 아들 이름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초호화 주택을 산 막내 아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수천 가닥으로 연결된 부르주아들사이의 끈”이 부패 구조에 활용됐다. 이용호와 김형윤이 고교 동창이었고 이용호의 로비를

받은 방송사 간부와 김홍일이 대학 동기였으며, 신승환은 ‘동생의 이름’으로 이용호의 기업 인수를 돕고 검찰 수사 축소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했다.

진승현·이용호·윤택식 게이트는 서로 얹히고 설켜 있는 일란성 세 쌍둥이와도 같다. “모든 게이트는 청와대로 통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부패한 기업인들과 국가 기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간 노릇을 했다. 청와대의 사정 책임자였던 신광옥은 진승현 게이트에 김대중의 “충고맨”으로 알려진 공보수석 박준영은 윤택식 비리에 연루됐다. 김대중 정권의 최장 수석 비서관 이기호는 이형택을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연결시켜 주었다.

‘슬방망이’

일련의 부패 스캔들은 김대중식 “개혁”의 허구성을 보여 준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희생과 절제, 안보와 질서를 강요하던 김대중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바로 주가 조작과 뇌물 잔치의 장본인들이었다.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산업은행·금융감독원 등 어느 기구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정원 경제단의 간부들은 정현준에 대한 주가 조작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했다. 그들은 진승현의 도피를 위해 신승남과 서울 지검장을 찾아가 구명 로비를 했고, 보물선 인양 사업 정보를 이용호에게 알려 주었는가 하면, 신승남과 골프를 치며 수사 은폐를 모의했다. 윤택식은 전 국정원장 이종찬의 도움으로 버젓이 국정원 건물 안에서 팩스 21 홍보쇼를 벌였다.

검찰은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서

일련의 게이트는 김대중 정권을 산산조각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정치쟁점을 회피하지 않는 활동이 노동운동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수많은 개미군단을 올린 부패사범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신승남이 수사 은폐에 깊숙이 개입한 덕분에 검찰은 지난해 신승환 수사 때 아예 계좌 추적조차 안 했다. 신승남은 정현준·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 김은성·김형윤과도 수시로 만나 골프를 쳤다. 옷robe 때문에 옷을 벗은 김태정이 바로 이용호의 첫 번째 변호사였다.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덕분에 게이트 수사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던 자들은 유유히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진승현 게이트의 로비스트 김제환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버젓이 LA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검찰이 기를 쓰고 보호하려 했던 자들은 경제 위기로 큰 부자가 된 자들이다. 기업 사냥꾼 이용호는 1997년 금융 공황 이후 기업 인수 합병 전문회사로 막대한 돈을 긁어모을 수 있었다. 주가 조작으로 154억 원을 긁어모으고 6백83억 원을 횡령한 그는 무려 1천8백19명의 리스트를 관리했다.

“돈 거래의 귀재”, “제2의 이원조”라 불리는 이형택은 퇴출 은행의 임원에서 퇴출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올랐다. 그는 “동화은행 퇴출의 유일한 수혜자였다.”

다른 권력 기구들은 어떨까? 국세청은 평범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3년 전 이용호의 60억 원대 회계 조작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조사에 그쳤다. 정통부 관료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핸드폰 요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작 윤대식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었다.

부패 기업인들과 뇌물 잔치를 벌인 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안보와 질서를 강조해 온 자들이기도 하다. 게이트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은 총풍·북풍을 일으킨 대공업무 지휘부였다. 5·3 인천 사태, 민애전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자 검찰 내에서도 정통 공안통으로 꼽혔던 바로 그 자(임휘운 전 부산고검장)가 2년 전 이용호를 단 하루 만에 “무혐의”로 풀어 줬다.

체제와 부패

최근 게이트의 모든 진원지가 벤처 기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련의 게이트는 “벤처 육성” 정책이 낳은 결과다. 경쟁은 이권 다툼을 더욱 부채질한

다. 이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뇌물과 로비가 빚발친다. 김대중은 부패의 엔진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부패의 진정한 토양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다. IMF와 세계은행은 부패가 ‘정실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엔론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부패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자체의 불박이 장롱이다. 투명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엔론 파산 이후 “회계 장부 조작 기구”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제 엔론, 타이코에 이어 IBM도 분식회계의 흑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부패 사슬 구조의 진정한 원조다. 한나라당 자신이 정치 자금을 위해 국가 기구를 동원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회창은 1997년 대선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했다. 현대·대우·동부·진로 등 25개 업체로부터 167억 원을 모금했다. 경부고속철도차량 납품사 선정 비리, PCS 사업자 선정 비리, 한보 비리, 전두환·노태우 미자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최근의 게이트 수사는 김대중 정권의 숨통을 더 죄어 올 것이다. 4대 게이트가 결코 끝이 되지 않을 듯하다. 벌써부터 제5게이트가 거론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5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한 벤처 기업(한별 텔레콤)의 돈이 이용호의 로비스트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국세청장 안정남의 탈세 의혹, 김대중의 집사 노릇을 했던 무기밀매업자 조풍언의 산업은행 건물 헐값 매입 등 어디에서 새로운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

부패는 정치 위기의 뇌관이 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쌓인 설움과 분노를 폭발시킬 수도 있다. 1997년 알바니아의 바르샤 정권의 몰락, 1998년 인도네시아 혁명, 2000년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정권과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정권의 몰락 그리고 에콰도르의 대중 봉기, 최근의 아르헨티나 봉기 등에서 부패는 주요한 도화선이 됐다. 일련의 게이트는 김대중 정권을 산산조각낼 폭발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정치 쟁점을 회피하지 않는 활동이 노동 운동에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를 훔치려는 도둑들

이인제

박정희를 닮고 싶어하는 자

민주당의 일곱 마리 용 가운데 기업에 친화적이고 노동자에 적대적이기로 제일 가는 후보가 바로 이인제다. 그는 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걸핏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혁명적 방법으로 규제를 없애겠다”고 장담한다.

그는 1997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키는 1mm도 안 틀리 [다]”며 박정희를 흠모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박정희가 보였던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벌에 대한 대중의 거부를 애써 무시한다. 가증스럽게도 그는 아예 우리더러 “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이인제의 일관된 구조조정 원칙은 다름 아닌 정리해고 밀어붙이기다. 그래서 그는 당선되면 그의 신념에 따라 가장 먼저 “공무원을 3분의 1 정도 감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인제의 신념은 “장사가 안 되면 내보내야 한다”는 말에 집약돼 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쉐치와 레이건을 흠모한다. (마가릿 쉐치는 1980년대 영국 총리였고, 로널드 레이건은 같은 시기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노조 위원장도 모여서 뽀지 못하고 우편 투표로 만 가능케 했”던 쉐치의 극심한 노조 탄압을 찬양했다.

이인제는 “일자리 창출”이 당선 이후 최대의 국정 과제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다 놀아 공공서비스가 멈추면”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인제는 반노동자적일 뿐 아니라 민주 개혁과도 거리가 먼 인물이다.

1997년 대선에서 개혁적 이미지의 필요성 때문에 “3김 청산”을 부르짖던 그가 최근 “3김 시대는 위대한 시대”라면서 노회찬 정치인들에게 아양을 떨고 있다. 그는 심지어 박정희 군사 독재의 2인자였던 김종필에게 “경륜 높은 정치사 거목”이자 “국가 원로로서 존경한다”라고 구애했다.

이인제는 자신이 마치 개혁적인 양 “학생 운동 참여는 자랑스럽다”고 말하지만, 학생 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들을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제의 정치 인생은 거짓말로 얼룩져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경선 승복” 발언이다. 그는 19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14번이나 약속해 놓고는, 경선에서 패배하자 탈당하여 독자 출마했다.

그 자신이 당선되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시로 말을 바꾸는 이런 자한테 과연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병호

노무현

파산한 김대중 개혁의 변호사

노무현은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정치 생명을 걸고 저항해” 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러나 정작 반개혁적 정치 형태가 불거질 때 그는 저항하기는커녕 요리조리 숨거나 피해 가기 바빴다. 지난해 민주당이 자민련에게 의원을 뺏은 사건을

두고 “언론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까지 거론하기 버겁”다고 회피했다.

노무현은 민주당 쇄신파가 인적 쇄신을 주장하자 “그 사람들도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인데 좀 먹고살게 놔 두면 안 되냐” 하며 인적 쇄신을 반대했다. 기자실에서는 쇄신파의 인적 쇄신 요구를 “찬성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권력형 비리들이 민주화 과정의 부산물인 양 말한다.

“뇌물 규모만 해도, 전두환 · 노태우 정권 때 수천억 원이던 것이 김영삼 정권 때는 수십 억으로, 현 정권에서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변화는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에 가능했다. 부패 구조는 다음 정권에서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이 야말로 우리 사회 부패구조가 개선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우기기까지 한다.

노무현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썰러 시대에 영국 공항이 마비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탄광 노조와 싸우느라 1년 이상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했어요. 사회 구조 개혁에 그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 인내심과 지지가 그 바탕이 됐던 거예요. 우리 국민은 말이죠, 5·6공 때는 그 가혹한 정치마저 잘도 참아 내더니 요즘은 이거, 너무나 것 아니요?”

그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할 만큼 잘못된 것도 없다”고 했다.

“기대치는 잔뜩 높아서 전혀 현실성 없는 요구만 끊임없이 해 대는 사람들,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자는 포섭 대상이기는 해도 지도자로 모시지 않는 것”을 자신의 “철학”이라 말하지만, 노무현이 “모시고” 있는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종필과도 손을 잡았다.

노무현은 김대중의 “정통성과 정치 노선을 올바르게 계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우리더러 5년을 더 참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노무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김덕엽

이미지만 '개혁적'

MBC 뉴스 앵커 출신인 정동영은 1996년 총선 때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입문 후 4년 간 국회의원 의와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집권 여당의 변명과 위선과 거짓말들을 거리낌없이 대변했다.

정동영은 지난해 민주당의 당풍 쇄신 운동에 참가해 개혁적 이미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정동영의 개혁적 이미지에는 실체가 없다. <한겨레>는 7명의 민주당 대선주자 중 정동영이 가장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은 “정치란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다수 국민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시장 지상주의 정책을 신봉한다. 정동영은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친시장 기조는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이어진다.

정동영은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그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정의보다는 효율을 강조하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다.

강철구

민주주의자에서 시장주의자로

김근태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노무현과 더불어 이른바 개혁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한때 민주주의 운동에 몸을 담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려는 개혁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물나게 겪었던 김대중의 ‘개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김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김근태는 현 정부의 “각종 개혁과 평화정책의 방향과 원칙은 계승해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만 쇄신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철도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는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고 매도한다.

평균 30퍼센트 수준인 중진국 복지 예산에도 못 미치는 13퍼센트의 복지예산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게 김근태의 지론이다. 그는 부유층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보다는 “탈루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근태가 지난해 8월에 맡았던 민주당 소득격차완화 특별위원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개점 휴업’ 상태다.

그는 최근 미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존중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조정자” 구실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타고 안보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개혁은 민주개혁과 거리가 멀다.

‘언론 개혁’ 문제에 불명확한 태도를 취한다며 이인제를 공격했던 김근태는 지난해 10월 탈세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을 면회했다. 또, “동교동계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던 그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동교동계의 우두머리 권노갑한테서 돈을 받았다.

김근태는 김윤환, 박근혜, 정몽준과 회동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에 골몰할 뿐이다. “YS가 민주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김영삼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김종필을 “서울대 학생운동의 선배”로 모시기도 했다.

1987년과 1992년 대선 당시 김대중에 대한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실제로는 무비판적 지지였다.)을 주창했던 김근태는 이제 김대중의 정책뿐 아니라 그의 집권 전략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수현

한화갑

부패 스캔들의 단골 주역

한화갑은 김대중 정권의 ‘넘버2’라 불리는 권노갑과 함께 “투갑스”라 불린다. 그의 부패 커백선과 조폭성은 영화 ‘투갑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리틀 DJ” 한화갑의 김대중에 대한 충성심은 조폭들의 의리를 무색케 한다. 그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김대중 정권과 차별성을 그으려 하자 “은혜를 모른다”며 그들을 비난했다. 김대중이 총재직을 사퇴할 때도 한화갑은 오직 김대중 걱정뿐이었다. “오

죽 시달렸으면 그런 결심을 하셨겠나. 한편으로는 의지하고 상의하던 어른이 우리와 틈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외롭고 불안하다. 이런 게 고아의 심정이 아닌가 싶다.”

김대중이 대선자금 20억 원 수수 고백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할 때도 국내에서 모금한 자금 중에 친일파 돈도 있었다”고 거들었다.

그는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다. “IMF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됐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었다.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경영이 좋아져 오히려 단가를 내릴 수 있다.”

한화갑은 부패한 정치인이다. 청와대와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국가 기구 자체가 부패의 온상임이 드러났는데도, 그는 “우리가 저지른 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것들이다. 대통령 주변은 직접 연루된 사람 없어 비교적 깨끗하다”고 우겼다.

이 말은 완전한 위선이다. 각종 게이트 때마다 한화갑의 이름은 거의 빠진 적이 없다. 그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호남의 조폭 여운환을 비호했다. 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로비사건에 연루됐다. 최근에는 레미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레미콘사업자연합회 회장 유재필 기소를 방해했다.

한화갑은 수많은 부패 연루설이 끊이지 않는 더러운 자다.

이원재

내가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려는 이유

최승호(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회 준비위원)

지난 2월 14일 제정부 소속의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비전 2011 보고서’는 김대중식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폐지, 등록금 자율화, 사립고와 입시학원의 통합, 기부금 입학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것은 내가 속한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연대 등의 교육단체들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내용들이다.

교육부도 반박 성명을 냈다. 이상주 부총리가 직접 평준화 해체와 기여 입학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한겨레>는 경제부처와 교육부처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한 시각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들과 일부 시도 교육청까지 반대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들의 줄기찬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논리로 뚫뚫 뭉친 7차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강행했다. 교육부 자신도 경제 논리로 뚫뚫 뭉쳐 있는 것이다.

다만, 성과급 지급이 교사들의 반납운동으로 불가능해져 올해 들어 포기 의사를 밝힌 것처럼, 교육부는 조직된 교육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머뭇거리고 속도를 조절해 더 은밀한 방법으로 추진되기를 원할 뿐이다. 여기에 대해 김대중은 2월 15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경제부처의 이야기를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라”고 교육부를 재촉했다고 한

다. 김대중식 교육개혁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대중은 ‘21세기 교육강국’, ‘신지식인’, ‘맞춤 교육’ 등 화려한 언사와 수식어로 장밋빛 교육 개혁을 약속하며 교육 대통령을 자부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교육 기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김대중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교육 부문에서 발을 완전히 빼고, 대신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 심지어 대학 졸업장까지도 —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이런 정책은 비단 교육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위기에 빠진 남한 자본주의를 건지기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있는 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 2년간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는 가정이 깨져 상처 입은 아이들이 한 반에 30퍼센트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 정부’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불릴 만큼 선거가 많다. 전교조에게는 더욱 그렇다. 전교조 자체 선거를 제외하고도 3월에 학교 운영위원장 선거, 6월에 지자체 선거, 8월에 교육 위원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선거에 대응하고 조합원들의

정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정치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거쳐 진보정당,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결의했다. 이것은 지난 시기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이 단지 그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계급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지난 3년간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계급 정당을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전교조의 많은 조합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망쳐 놓은 교육을 되살려 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능 성적이 나빠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부자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더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경련 등에 밀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키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의사들이나 약사들에게 밀려 의료비 부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구조조정으로 깨져 버린 가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80이 넘어 등이 구부러진 할머니가 혹한에 하루종일 거리에 나와 바구니 몇 개에 나물을 올려 놓고 파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 환멸을 느낀 교사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강철구

1월 20일에 재정부장관 진념은 “한미투자협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짓겠다.” 하고 말했다. 김대중은 집권 초인 1998년 미국에 한미투자협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으로 협상은 지연됐다. 핵심 쟁점은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상영제)였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폐지 없이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압력을 넣었다.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인과 시민단체 들은 즉각 반발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스크린쿼터제를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에 대응,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에 직면해 김대중 정부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를 유보하겠다고 한 말 물러났다. 그러나 부시는 방한 기간 동안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WTO를 통해 밀어붙이기 힘들거나 지연되는 사안들을 양자간 투자협정을 내세워 관철하려 한다. 미국은 지난 10년 간 40개 국가와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한미투자협정도 애초에는 1994년에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WTO 같은 기구들과 양자간 투자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수단이다.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상대국 민중이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멕시코 민중의 삶을 빈곤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1994년에만 84만 명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겼다. 미국 기업들은 노동 기본권을 짓밟았고, 환경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파괴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라틴 아

메리카 민중이 겪은 고통을 이제 한국 민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미국 자본의 권리현장이다. 미국이 제시한 표준안 6조에는 “의무이행 강제의 금지 조항”이 있다. 이것은 노동 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안전기준 등 모든 “의무이행”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다.

1월 중순 한국을 방문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존 헌츠만 일행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대폭적 시장개방”을 주문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완화하라, 승용형 디젤차의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완화하라,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라…”

미국은 의료·교육·통신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다국적 기업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려 한다. 사기업화와 개방화가 이뤄지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돼 온 경로 우대 등의 할인 혜택이 폐지될 것이다. 외딴섬이나 벽지의 전화와 통신은 내팽개쳐질 것이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보조금은 “시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치급될 것이다. 농가 보조금은 “자유 무역”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삭감될 것이다.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값싸게 공급하려는 시도는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좌절될 것이다.

좌절

김대중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 한다. 김대중은 외자 유치가 왜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되지도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로 채워져 있다. 투자협정은 ‘투자’의 개념을 단기 수익과 배당금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단기성 투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렇게 되면 투기성 단기자본을 규제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외국인 투자



자 보호는 국제 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뜻하게 된다. 그리 되면 경제는 급격하게 불안정해질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기술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 내국인을 고용할 의무도 없다. 투자 수익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어 국내에 재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가의 부지 임대료를 보장해 주려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국제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같은 물에서 함께 놀고 싶어하는 국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민중의 삶을 희생시킬 것이다.

“자유 무역”이라는 허울 아래 환경과 기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망가지고 한국 민중의 생활수준이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 자본가들의 탐욕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한미투자협정을 좌절시켜야 한다.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스크린쿼터제

최근 몇 년간 성장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은 세계화가 문화에 끼친 해악들을 폭로해 왔다. 52개국의 3백여 문화단체들이 참가하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문화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할리우드 이외의 국내 영화가 많이 상영되는 것을 보고 스크린쿼터제를 주목했다.

물론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된다 해서 자동으로 관객이 좋은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영화가 자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돼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영화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관객의 선택은 더 제약될 것이다.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은 스크린쿼터제 사수 투쟁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 투쟁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영화만을 봐야 한다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꼭 ‘문화적 분리주의’나 ‘토착 문화’만을 고

집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문화는 국경을 초월해 서로 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 세계 영화의 85퍼센트를 독점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대자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공격하고 있다. 세계의 영화를 자기 입맛대로 획일화시키는 할리우드 영화 자본의 횡포와 압력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다.

스크린쿼터제 사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오만한 미국 정부를 앞세운 할리우드 자본의 압력에 저항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일부다.

가진 자들만의 권리 찾기

김성보

경제적 논리로 만들어진 교육 계획은 교육의 비전이 될 수 없다.

지난 2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교 평준화 해제, 고교 등급제 실시, 대학교 기부금 입학제 실시를 골자로 한 '비전 2011'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KDI의 '비전 2011'은 진남 경제부총리가 1월 31일 밀레니엄 포럼에서 "차라리 일제 시대의 교육 체계가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다"며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폐지와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주장했던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KDI와 진남 부총리의 발언은 공교육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KDI와 경제부처의 교육관은 일관돼 있다. 교육을 시장에 내맡겨 국가의 교육비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소수 엘리트에게만 교육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비전 2011'에는 16개 국책기관이 참여했으나 한국 교육개발원을 비롯한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됐다.

고교 평준화를 깰이내리는 우익들

진남 부총리는 강남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수도권 의 고교 평준화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평준화로 '수준 별'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급 학원이 몰려 있는 강남 대치동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은 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과도한 입시 경쟁이다.

또, 강남의 부동산 값이 뛰는 진짜 원인은 오랜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주택 정책의 책임을 고교평준화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경제부총리의 무책임에 어처구니가 없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도입됐다. 청소년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망국

적 과외병을 없애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평준화가 확대됐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 많다. 고교 평준화는 학교별·지역별 교육 여건의 차별 해소와 고등학교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해 왔다. 또, 고입 과열 과외 완화와 초·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 주었다.

<조선일보>는 2월 1일자 사설에서 "평준화 28년은 곧 학력의 하향 평준화 과정

경쟁 교육이 배제 한 아이들.
고교 평준화 해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낙오자 인생"으로 내몰 것이다.

이었다”며 진념의 평준화 해제 주장을 지지했다. <조선일보>의 근거는 한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중상위권에 밀집돼 있고 최상위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중상위권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반대로 평균적인 학력 상승을 뜻한다.

우리 나라의 학생들은 세계적인 학습량을 ‘자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학생들은 연간 1백50~1백80일 정도 학교에 간다. 우리 나라는 연간 2백20일 이상 학교에 간다.

한 시간에 배우는 학습량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학생들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가 많다. 게다가 방과 후에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도록 내몰린다.

우익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학력이 저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평준화로 고교입시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5일제 수업으로 학습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처럼 대학까지 평준화하는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입시지옥과 과외병을 끝장낼 대안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 학교

KDI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를 요구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귀족학교다. 연간 1천만 원 가량의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집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자립형 사립고를 전국에서 5개의 시범학교로 축소했다. 서울시에서는 단 하나도 시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KDI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대부분의 사립학교로 확대될 경우 입시 사설학원과 사립학교는 차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교육 목표가 대학 입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 KDI는 고등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등급제는 학교 연좌제다. 학생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선배들의 실적에 따라 후배의 내신성적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는커녕 지금보다 더 심한 입시지옥을 낳을 뿐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노골적으로 부



정한다. 대학교의 높은 문턱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노동자·서민의 자녀들을 더욱 소외시킬 것이다. 부자들의 자식들에게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부금 입학제는 불평등과 사회적 특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진념 경제부총리와 KDI의 충격적인 교육정책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기부금 입학제, 고교 등급제, 평준화 해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준화 해제 주장에 양보해 자립형 사립고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3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가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의 보완이라던 각종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입시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자립형 사립고는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귀족학교의 양산으로 귀결될 뿐이다.

김대중은 학벌 타파를 주장했던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5공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상주를 신임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한 경제부처의 몰상식한 발언과 개입에 대해서도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진념과 KDI의 주장을 두둔했다. 이상주는 2000년도에 쓴 책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장의 학교 행정권에 대항하고, 사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의 합법화가 교직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던 자다. 김대중과 이상주가 교육 정책에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교육을 일부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대중적 저항으로 좌절시켜야 한다. 

“우리는 철도를 멈출 수 있다”

이정원

철도 노조를 비롯한 6개의 공공부문 노조가 사유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즉시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시 2월 25일 연대 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선언했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사유화 및 해외매각 철회,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 증원, 노동조건 개선, 노정교섭 실시, 그리고 사유화에 대한 대국민 TV 토론회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투본은 민주노총의 허영구 직무대행과 한국노총의 이남순 위원장에게 정부와의 협상을 위임했다.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선봉에는 철도 노조가 있다. 철도는 사유화를 앞두고 진행돼 온 구조조정 때문에 고용·노동 조건 모두가 심각하게 후퇴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철도 기능직만 6,783명이 감축돼 노동 강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들 몇 명이 육아휴직이라도 내면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니 철도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파업 참여 결의 서명을 하던 노동자는 말한다. “파업하다 잘리는 게 민영화돼서 잘리는 것보다 낫지.”

“우린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1백년 전 노동자들의 처지와 다를 게 없다.” ‘세계 최장시간’ 근무 노동자(월 270~300시간)의 항변이다. 오죽하면 건교부 국정감사 때 “철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70년대 청계천 여공들을 연상케 한다.”고 개탄하는 의원이 있었는가.

한 노동자는 이번 파업을 “크게 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이다.”고 규정했다. “철도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유화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

아. 개들은 자기 고급 자가용 타고 다니지 열차 타고 안 다니거든. 그러니 열차 사고로 피해보겠어 아니면 요금 이 올라 걱정하겠어. 이거 잘 해서 좋은 자리 하나 꿰차면 그만이지.”

한 역의 승무원들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반복 승무 거부’ 운동을 조직했다. 정비창의 노동자들은 잔업 거부를 준비하고 있다. 정비창은 열차의 중대한 결함을 보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철도 조합원 가족들은 ‘가족 대책위’를 조직하고 있다. “파업 때 출근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파업 참가자 가족만큼 확실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한 활동가는 파업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천, 의정부, 분당, 수원 등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국철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서울로 매일 통근하는 사람 수가 일만데요.” 얼마 전 영국 철도 회사인 SWT(사우스웨스트레인) 노동자들은 2십만 명의 정기 통근자들이 이용하는 철도를 멈춰 하루에 150만 파운드(약 3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블레어와 SWT 경영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전부절 못했다. 그는 파업의 전술에 대해 주장했다. “파업에 들어가면 수색 기지에 모이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수색 기지에 있는 차량에만 2만 명이 들어가요. 이 추운 날에 천막 안 쳐도 돼요. 침탈 대비에도 효과적이예요. 우리를 끌어내려면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와야 하는데 유리창 부수면 운행을 못하죠. 또 유리창 보수할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데 어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색 기지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잘 알고 있는 것도 유리한 점이지요.” 이것은 공장으로 치자면 공장 점거 전술이다.

게다가 이 방법은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다. 노동자들이 산개하지 않고도 한 곳에 집결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지 중에 기지를 점거하는 것이기에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찰력에 맞서 파업 대오를 방어하기 효과적이다.

파업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자신감만 충만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다.

대체 인력 투입은 많은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다. 철도는 고유한 성격상 직종별 분리 외에도 다른 분리가 있다. 바로 기능직과 일반직의 분리이다. 이것은 채용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체 3만 명 중 약 4~5천 명 정도가 일반직이다. 일반직은 기능직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똑 같은 일을 하고 처우도 다르지 않다. 다만 승진이 좀 더 이로운 정도다. 그러나 일반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반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기란 여간 높은 자신감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 일반직 노동자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파업 파괴자 노릇을 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일반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끌어내는 것은 철도 파업이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연대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 선포에 정부는 “민영화 추진은 정부의 손을 떠나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최종 판

단만 남아있다”며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여·야당 국회의원들 역시 사유화 시기와 방법을 부분적으로 문제삼을 뿐 사유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한나라당이 사유화를 반대할 리는 만무하다.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안으로 한국통신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5개 화력 발전 시설 매각을 추진하는 등 담배인삼공사, 가스, 지역난방, 이렇게 5개의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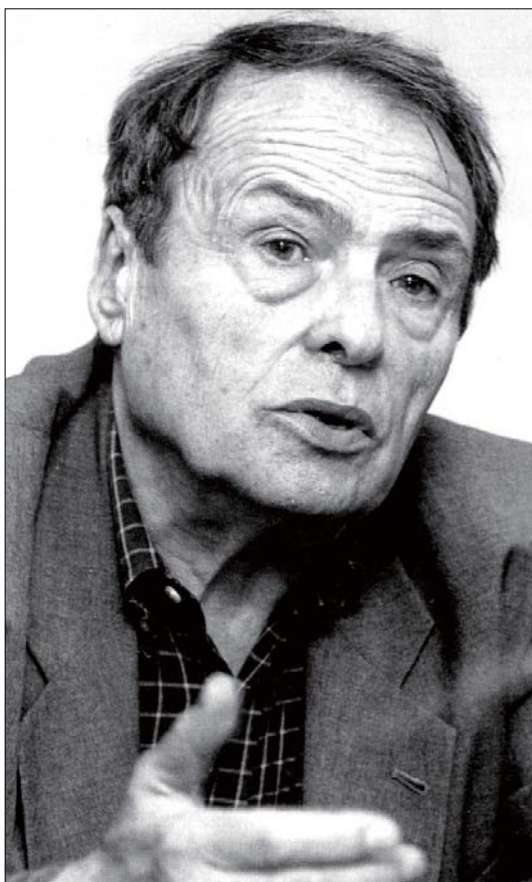
정부는 한국통신과 전력, 금융의 구조조정은 올해 안에 최대한 밀어붙이려고 한다. 노조 지도부의 투쟁 회피주의에 힘입어 노동자들의 최초의 저항을 그럭저럭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철도는 노동자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 사유화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통과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소망은 있으나 밀어붙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 여전히 계속 눈치를 살피며 기회만 노리

고 있다.

정부가 철도와 다른 공공부문을 분리시켜 저항을 피해가려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기 위한 술책이다. 철도 노조도 이 점을 간파하고 이번에는 임시 국회 때 통과가 유보되더라도 끝장을 보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마침 2월 15일 철도·가스공사·발전산업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만일 정부가 3개 노조의 요구 중 어느 하나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2년 전 한국통신·전력·철도·도시 철도 노조가 각각 따로 파업을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한층 진보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지금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는 이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목 자르고 지방으로 전출시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열차를 멈출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 부르디외를 추모하며



앨릭스 캘리니코스*

지난 1월 23일 프랑스의 탁월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파리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1930년 프랑스 남부의 시골에서 태어난 부르디외는 끌레주 드 프랑스(프랑스의 최고 석학들이 교수진으로 있는 시민 대학 또는 개방 대학) 교수를 지낸 프랑스 학계의 최고봉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계의 비참》(동문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를 고발했다. 죽기 전 10년 동안 부르디외는 정치 활동에 투신해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의 거목 중 하나가 됐다.

부르디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스트구조주의의 거장 철학자 미셸 푸코, 질 들뢰즈, 자끄 데리다 등과 같은 세대다. 그는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데리다와 함께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쓴 책에서 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구조주의·포스트구조주의 사이의 대립 — 그는 이것을 쓸 데없는 대립이라고 여겼다 — 을 뛰어넘으려 했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개별 주체를 세계의 주인으로 보는 반면, 구조주의나 포스트구조주의는 그런 주체를 비인격적인 구조와 과정의 산물로 여긴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라는 유명한 개념을 통해 이런 대립을 피하려고 했다. 그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 일상 생활에서 행위나 지각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저작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별짓기》(새물결)에서는 그가 ‘문화 자본’이라고 부른 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개인의 예술적 취향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문화 자본이란 중간계급 가정에서 익숙한 상징들, 그리고 대학 입시나 고소득 직종에 위한 경쟁에서 그들의 자녀에게 결정적으로 유리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탁월한 지식인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명성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제공했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가장 강력한 대변인 가운데 한 명을 잃었다.”**

* 앨릭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중앙위원이며 반자본주의 연설가로도 유명하다.

한 상징들을 다루는 기술을 말한다.

부르디외는 과학이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상대주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스스로를 19세기 말 에밀 뒤르캥의 저작에서 유래한 프랑스 사회학 전통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학적 객관성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도 알고 있었다. 《파스칼적 명상》(동문선)이라는 탁월한 저서에서 부르디외는 학술 연구와 일상 생활을 분리시키는 간극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비교적 풍족하고 여유 있는 학자 생활은 사회적 특권의 한 형태이지만 그 덕분에 평범한 물질적 압력에서 벗어나 현실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는 주장했다.

부르디외의 초기 저작 일부는 겉보기에 자율적인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세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토대를 갖게 됐는지 잘 보여 준다. 그는 《예술의 규칙》(동문선)에서 19세기 파리의 모더니즘 미학이 출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는 끝없는 경쟁을 분석하는데, 그런 경쟁 속에서 각각의 예술적인 혁신이 더 큰 사회에 수용되고 동화됐듯이 새로운 유파들이 나타나 훨씬 더 상식에 어긋난 스타일과 기법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현대 예술은 절대적 자율성을 선언하지만, 그 발전은 부르디외가 ‘예술적 장(場)’이라고 부른 것의 사회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예술의 규칙》은 현대 프랑스 사회의 탁월한 인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 인물은 예술이나 과학 영역에서 거둔 업적으로 명성을 얻고 그런 권위를 이용하여 공적 생활에 개입한다. 1890년대의 드레퓀스 사건에 개입한 에밀 졸라나 제2차세계대전 후의 장 폴 사르트르가 그런 예다.

생애 말년에 이런 역할을 향해 한발 나아간 사람이 바로 부르디외 자신이다. 1970년대 말에는 프랑스의 소위 ‘신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스탈린주의와 동치시킴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지적인 세계의 주변부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1989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1995년 11월과 12월의 공공부문 대파업에서 저항은 폭발했다. 그리고 부르디외는 그런 파업을 열정적으로 옹호했다. 그의 초기 저작들에는 피억압자에 대한 공감에 저변에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부르디외는 1995년 12월에 파리 북부역 앞에서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에게 “문명의 파괴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자나 난민 등이 직접 행동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을 지지했다. 부르디외는 가까운 협력자들과 함께 그가 ‘연구자 활동가들’의 조직이라고 부른 ‘레종 다쥐르’ (‘행동해야 하는 이유들’)를 결성했다. ‘레종 다쥐르’는 값싸고 얇은 책들을 시리즈로 출판했고 이는 널리 읽혔다. 이런 책들은 부르디외가 ‘숙명론’이라고 비난한 것, 즉 정치인·언론인·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데 이용한 ‘숙명론’을 산산조각냈다.

1997년 6월에 집권한 리오넬 조스팽의 ‘복수 좌파’ 연립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자 부르디외는 가차없는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블레어-조스팽-슈뢰더’라는 신자유주의 트로이카’에 대한 대안으로 1995년 이후 발전해 온 사회운동에 기초한 ‘진정한 좌파’ (‘좌파 중의 좌파’)를 소집했다. 그는 이제 학술 세미나보다는 노동조합 대회에 훨씬 더 자주 나타났다. 농민 지도자 조제 보베는 2000년 6월 미요의 대규모 시위에 참가한 부르디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이를 동안 토론에 참가했다. 거기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름 없이 앉아 있었다.” 부르디외가 비록 금융투기 반대 운동 단체인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ATTAC)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토프 아기통과 정치적으로 절친했지만, 어떤 친구에 따르면 그는 “ATTAC이 너무 개량주의적이고 정부 당국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다.”

부르디외의 저작들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 내기는 어렵지 않다.

이론적으로 그의 저작들은 부당하게도 마르크스주의를 결정론으로 여기는 잘못이 있어 보인다. 정치적으로 그는 비록 국가 차원에서는 실패한 사회민주주의를 유럽 차원에서 재창조하여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탁월한 지식인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명성을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제공했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가장 강력한 대변인 가운데 한 명을 잃었다. 

동물 권리 옹호론에 대한 재반론

이정구

나의 글(《다함께》 2002년 1월호에 실린 “보신탕 논란”)에 대해 바라 씨가 반박글을 보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바라 씨가 나의 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고, 또 그의 반박글을 계기로 동물 권리 문제에 관해 심층적인 토론과 논쟁을 할 기회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바라 씨의 글에는 몇 가지 논쟁할 만한 게 있다. 그가 운데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라 씨는 “동물 권리란 윤리적 권리를 의미한다. 즉, 동물들도 존중돼야 할 권익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은 모순이다. 고양이가 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도 토끼의 권리를 용인하지 않는다. 쥐나 토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라 씨가 암시하는 것처럼,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권리’란 사실은 동물을 존중해 줘야 할 인간의 윤리적 의무를 뜻한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갖는 논리적 모순은 이전의 나의 글에서 밝혔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을 존중해 줘야 할까 하는 점에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 판단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대해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무감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비판에 반대할 생각도 전혀 없다. 사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자연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필요 때문이지 동물의 권리라는 신비스런 개념 때문이 아니다.

피터 싱어 같은 좌파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 아니면 우익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동물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자연 세계는 이들의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한 동물의 권리 옹호는 다른 동물의 권리 침해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유기체가 경쟁 관계와 동시에 협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생물학의 근본 원리이다.

육식과 모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신체 안에서도 다른 많은 유기체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 종들이 진화했고 어떤 종들은 사라졌다. 생명체의 진화 과정은 각종 동물의 권리가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또한 충돌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바라 씨를 포함한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이 동물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인간 이외의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 사이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물론 나는 불필요하게 동물을 학살하거나 학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인간으로서 인류가 질병과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물의 고기를 먹고 그 가죽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또한 동물 실험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간이 아니라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일 뿐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바라 씨가 주장한 것 중 두번째 문제는 과학에 대한

입장이다. 바라 씨는 “과학은 이데올로기다. 이윤을 창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 법칙인 것이다.” 하고 주장했다.

바라 씨는 자본주의에서 과학이 하는 역할 가운데 매우 중요한 측면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에 투입되는 기금의 95퍼센트 이상은 군사적 목적이나 이윤 추구 또는 이 둘 모두를 위한 연구에 사용된다. 그래서 나 자신도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병원과 제약 회사들은 인간의 필요보다는 이윤을 위해 신약 개발을 하고, 질병 치료보다는 특허권 획득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바라 씨의 주장처럼 모든 과학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인 것은 아니다.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개발은 인류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많은 의약품과 의료 행위는 동물 실험 덕분에 인류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었다.

바라 씨는 과학이 이데올로기라고만 여기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톰 리건이나 피터 싱어 같은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 치유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뇨병 같은 질병의 치료, 면역 지식, 장기 이식의 기초가 되는 면역 조치, 그 밖의 많은 예방 의약품이 동물 실험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동물 실험 외에 달리 대안은 없어 보인다.

어떤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동물 실험 대신 조직 배양이나 박테리아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예컨대 현대 산업 사회의 질병이나 사망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불안, 신경성 질병, 뇌졸중 등을 연구하기 위해 뇌를 가진 동물을 실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

마지막으로, 바라 씨는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뼘음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관계 없이 그들 사이의 공통점인 동물 권리 옹호라는 측면에서만 비판했다. 바라 씨는 지배계급의 동물 보호론과 좌파의 동물 권리 옹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동물의 권리 문제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아쉽다.

그리고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 중에서 그 좌측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라 씨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1930년대 나찌 독일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했던 것을 동물 권리 옹호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물론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 중에서 피터 싱어 같은 정치적 좌파 인물들은 나찌에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 내에는 공공연하게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자본주의에서 과학이 하는 역할 모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과학을 창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 때문에 인류가 직면한 도덕적·정치적·사회적 선택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이데올로기일 뿐인가?

안진영

구도 진행됐다.

《다함께》 9호 독자투고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역겨운 자들인가”에서 바라 씨는 에이즈에 대한 현재의 주류 이론이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나는 바라 씨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라 씨의 입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들어 반론을 펴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바라 씨는 과학의 객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라 씨가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 — ‘과학은 이데올로기이다’ — 을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바라 씨가 예로 든 과학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에이즈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또, 듀스버그나 케리 폴리스 등의 연구 결과도 바라 씨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듀스버그는 주로 AZT라는 초기 에이즈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거짓과 사기가 난무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라 씨는 어떤 연구도 에이즈의 존재나 HIV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적 연구 결과는 대부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에이즈

바라 씨의 주장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학은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도구 역할을 한다. 예컨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전자 지도를 해집고 다닌다. 또, 동성애자의 뇌의 구조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연구하기도 한다. 바라 씨의 주장대로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이 옮기는 병이라는 편견을 부추기기 위한 연

구도 진행됐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학은 엘리트주의적이다.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은 과학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리고 어떤 영역 — 예컨대 공장의 유해 물질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조차 않거나 하더라도 그 액수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바라 씨가 과학을 단지 지배자들의 음모로만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과학의 객관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관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배자들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과학이 사회 현상, 즉 인간 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단이라면 자연과학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수단이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류가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생산력의 혁명적 발전은 불평등한 생산관계에도 불구하고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건설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복잡하고 거대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필요로 했다. 사장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질신했다. 자연과학의 성과에 의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낸 거짓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컴퓨터나 기계를 돌릴 수 없다.

또, 꾸며 내거나 날조한 거짓말만으로 사람을 달래 보내거나 복잡한 외과수술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나 생산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평등한 생산관계를 은폐하고 왜곡시켜 현존 체제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지배자들의 사회과학 — 경제학, 정치학, 법학, 철학 등 — 은 '객관성' 보다는 사실의 체계적인 은폐와 왜곡을 위해 발전했다. 현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연과학이 사회과학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자연과학에서 얻은 객관적 사실들이 현실에 응용되고 자본가들에게 유용한 기술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

인류를 에너지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었을 핵 에너지의 발견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핵 폭탄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약(가령 클리백)의 가격을 제약회사가 비싸게 매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 간다.

어떤 사실들은 반쯤만 알려지고 어떤 사실들은 은폐된다. 게다가 각각의 사실들은 서로 분리돼 따로 제시된다. 노동자들은 신문과 뉴스를 아무리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지배자들이 거짓 과학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어서 라기보다는 불평등한 생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이데올로기들이 자연과학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들은 자연과학적 발견으로 무력화되고 폐기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려고 시도한 연구들은 그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찾아 냈을 뿐이다. 인종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낳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과학과 이데올로기

바라 씨가 예로 든 에이즈의

경우, 지금의 연구 결과가 모두 진실이라거나 우리가 모든 결과를 알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밝혀진 과학적 연구 결과에 비해 형편없는 의료 제도가 에이즈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수혈과 주사제, 가족이나 친지, 연인 간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이즈가 동성애에 의해 전파된다는 것은 거짓이지만 그것이 불결한 환경과 소홀한 검사 탓에 더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적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헌혈과 수혈에 대한 과학적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에이즈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염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과 살고 있는 것이 에이즈 창궐의 진정한 이유다.

이런 사실들은 바라 씨의 주장과는 달리 에이즈가 바이러스성 질병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현대의 많은 질병들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업주들보다 노동자들에게 많이 생긴다. 하지만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병원균이다.

한때 질병의 원인을 병원균 하나로만 여겼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병원균보다 사회 환경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바라 씨가 모든 질병의 치료가 병원균에만 집중돼 있는 현실을 꼬집는 것은 옳다. 하지만 병원균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세계화와 여성 노동자

정진희

요 몇 년간 반자본주의 운동이 성장하면서 세계화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논의가 증대해 왔다. 세계화가 여성에 끼친 영향도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다.

많은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끼친 부정적 측면을 폭로해 왔다. IMF, 세계은행, WTO 같은 기구들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분명 대다수 여성의 삶은 황폐해졌다.

공공 서비스 삭감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보건의료비 삭감으로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을 돌보는 일이 개별 가정에서 떠넘겨져 여성의 부담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많은 가정을 강타한 빈곤 때문에 절망이 깊어지면서 가정 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9년 보고서에서 가정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매매춘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역시 늘고 있다. 매매춘 증가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 예컨대 옛 소련과 동유럽 등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또한 끔찍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자유무역지대나 수출촉진지대에서 여성들이 겪는 일들이 대표적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유무역지대의 흑사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의 60~90퍼센트가 여성이다.

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인 결과, 노동조건은 최악이다. 노동시간은 12~14시간이나 되고 임금은 매우 낮다. 화장실에 가려면 ‘소변 카드’에 소요 시간을 표시받아야 할 정도로 노동 통제가 극심하다. 건강과 안전 기준은 무시되고 노조 건설은 탄압받는다.

물, 하수 시설, 전기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물과 땅을 오염시키는 산업 쓰레기 때문에 악취에 시달린다. 여성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성희롱에 시달리기 일쑤다. 임신한 여성은 해고된다. 일부 수출촉진지대, 특히 중남미와 대만과 필리핀에서 여성은 고용되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연령은 14~25세 사이인데, 이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은 “너무 늙어서” 직장을 떠나야 한다.

저항

세계화가 빈곤을 없애고 부를 “흩어 넘치게 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약속은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세계화가 여성들에게 끔찍한 결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는 여성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그러한 파괴에 맞설 수 있는 세력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20여 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은 거의 모든 곳에서 여성들을 경제 활동에 끌어들었다. 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신흥공업국에서 두드러진다. 이 곳에서 여성 노동자 수는 지난 20년 간 거의 갑절로 늘었다.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 수는 1980년 1천6백93만여 명에서 1997년 3천3백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아일랜드에서는 1980년 34만6천 명에서 1999년 64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1980~1999년에 필리핀에서는 6백7만 명에서 1천9백만 명으로 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5백22만여 명에서 8백30만 명(전체 노동인구의 40.9퍼센트)으로 늘었다.

선진국에서 여성 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영국에서 여성 노동인구는 1995년 전체 노동인구의 49.5퍼센트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45퍼센트를 넘어섰다.

여성이 대거 노동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결과, 많은 여성들이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게 됐다. 많은 농촌 여성들이 도시로 와 노동자가 됐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남편과 남자 친척에 의존해 온 여성들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여성은 독자적 목소리를 내게 됐고 무엇보다 온갖 고통을 낳는 비인간적인 체제에 맞설 힘을 갖게 됐다.

오늘날 여성은 단순한 체제의 희생자가 아니라 체제에 저항할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계급의 일부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세계 자본주의가 가하는 가장 끔찍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인도네시아 여성 노동자다. 1998년에 IMF의 지원을 받은 독재자 수하르토를 타도한 혁명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전투적이라고 말한다. '총체적 개혁을 위한 노동자 위원회'(COBAR)의 한 조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공장이 가장 전투적이다. 가장 활동적인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가한다. 각 작업장 대표는 대개 공장에서 가장 활동적인 노동자들인데, 흔히 여성이다. 대표는 항상 연설을 하는데 남자가거나 여자가거나 상관 없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들 — 불평등 임금, 사회 조건, 차별 지급되는 식량 수당, 성희롱 — 도 제기하려고 노력한다.”

아시아, 카리브해 연안,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수출 공단이나 자유무역지대에서 여성들은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집단 행동을 벌인다. 1996년 5월 29일 멕시코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커스토티엄 회사 노동자들이 경영자와 어용노조에 맞서 파업했다. 그들은 “마킬라도라 정의를 위한 연합”에 속한 멕시코와 미국 단체들의 도움을 얻어 승리했다.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에서도 조직에 성공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여성 청소부들이 노조를 만들었고 유럽에서는 가정부나 파출부들이 조직을 결성했다. 볼리비아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물 공급을 다국적 기업 벡텔로 사유화하려는 정부 계획을 좌절시켰다.

우리 나라 여성 노동자들의 전투성도 그 못지 않다. 1970~1980년대 초까지 노동 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1987년에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적 파업

물결을 일으켰다. 여성 노동자들은 1997년 1월 노동법 파업에서도 힘을 보여 줬다.

1997년 경제 불황 이후 정부와 기업주들의 강화된 공격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2000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중요한 파업들 — 7월 11일 금융 파업, 여름 내내 벌어진 사회보험노조와 호텔3사 노조의 파업, 12월 국민·주택 은행 파업 — 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장 적극적인 파업 참가자의 일부였다. 또, 캐디·보험설계사·방송구성작가·학습지도사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기게 싸워 왔다.

오늘날 세계 여성 노동자들은 세계화가 낳는 온갖 고통과 야만 — 가난, 환경 파괴, 군국주의와 전쟁 — 에 맞설 진정한 세력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여성인권대회

국제 여성의 날 위대한 전통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은 독일의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이 1910년 국제 사회주의 대회에서 제안해 시작됐다.

● 3월 8일은 1908년 미국 뉴욕의 혹사 의류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해 선택됐다.

●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중심 요구 가운데 하나는 보통선거권이었는데, 1910년에도 여전히 논쟁거리였다.

● 가장 중요한 ‘국제 여성의 날’은 1917년 러시아에서 경축됐다. 1917년 3월 8일(러시아 구력으로 2월 23일) 여성 노동자들이 벌인 시위는 2월 혁명을 촉발했다.

포르투 알레그레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향해

장석준(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부장)

흔히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 포럼’이 올해에는 미국의 뉴욕에서 열렸다. 해마다 스위스의 산간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으로 불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를 수 없게 됐다. 그 이유는 스위스 정부가 더 이상 이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다보스는 자본 주도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대들로 떠들썩했다.

부자들의 휴양지에서 뭐 하지도 모르게 진행되는 이전의 다보스 포럼이 일말의 신비감을 갖고 있었던 데 반해,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이번 세계경제 포럼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대명천지에 나오자 사람들은 그 전 세계 부자들의 카테일 파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흡혈귀들’에게 햇빛은 해롭다는 것을 다시 입증해 보였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서는 오히려 작렬하는 태양 속에서 생명력을 떨쳐 보인 또 다른 잔치가 열렸다. 작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며 시작된 ‘세계사회포럼’ 2차 대회가 그것이다.

6배로 커진 잔치, 6배로 더 강해진 세계민중의 힘!

세계사회포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애초에, 시애틀 투쟁을 통해 기업을 토한 세계화 반대 운동을 자본주의의 대안을 버리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킬 계기를 고민했던 것은 브라질의 민주노총 CUT와, 땅 없는 농민들의 유류지 점거 운동으로 유명해진 농업노동자조직 MST였다. 이들은 프랑스에 본부를 둔 반세계화운동 단체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프랑스의

유력 진보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주도하고 있다)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과 프랑스의 진보세력을 양대 축으로 ‘세계사회포럼’ 1차 대회가 작년 2월에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다. 포르투 알레그레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이 10년 이상 시정(市政)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예산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곳이다.

올해도 세계사회포럼은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됐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국제적 관심 면에서나 이번 대회는 불과 1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장했다. 전 세계 4천9백여 개 단체에서 1만9천 명이 공식 참가했다. 주최측이 배정한 1만 2천 명의 공식 참가단 규모를 훨씬 넘어섰다. 총 참가자는 5만 명 이상이었다.

첫날인 1월 31일에 열린 가두행진에는 7만 명이 참가했다. 27개의 큰 회의와 1백30개의 세미나가 진행됐고, 수많은 주제들을 다룬 7백 개의 워크숍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좌파 인사들의 참여도 늘었다. 노엄 촘스키를 비롯해서 지구상의 웬만한 좌파 이론가·운동가들은 그 시간에 다 포르투 알레그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우파 정치인들까지 세계경제포럼을 마다하고 이 곳으로 날아 왔다. 주최측의 평가에 따르면 1회 대회에 비해 6배의 성장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포르투 알레그레는 대안 세상을 꿈꾸고 실제 그것을 향한 발 내딛고 있는 자들의 ‘소우주’였다. 아마도 10년 이상 참신한 진보정치를 추진해 온 이 도시의 저력이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잔치였을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행사 안내를 받고, 거리 곳곳에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대회 구호가 적힌 가로 현수막을 보고, 1백50여 페이지짜리 컬러판 무료 일정 안내서를 받으면서, “과연 국가 권력을 잡아야겠구나” 하고 느꼈다는 한 미국 운동가의 소회가 장난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향해

첫날의 가두시위에서 리우 그란데 두술의 주지사 올리비우 두트라(노동자당 좌파 지도자)는 “미국의 전쟁 광기와 아르헨티나 위기야말로, 바로 지금, 세계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사회운동, 노동운동, 지역 민중의 힘”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심화, 대중의 참여는 자본과 시장의 독재를 끝장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트라 연설은 대회 전체의 음조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놓고 급진적이면서 진지한 논쟁이 꽃을 피웠다. 예를 들어, 제3세계 외채 위기에 대한 토론은, 대회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르헨티나에서 외채 문제로 인해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는 가운데, 유례 없는 열기를 띠며 진행됐다. 많은 이들이 ‘외채 상환 채협상’이 아니라 ‘외채 탕감’에 손을 들어 주었다. 워싱턴[뉴욕의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색내듯 이야기되는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의 외채 경감 조치는 비웃음만 샀다.

포르투 알레그레가 상징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토론도 뜨거웠다. 이탈리아 공산주의계단당 서기장인 파우스토 베르티노티는 참여예산제 실험을 “자본주의 틀 내에서 미래 사회주의의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참여예산제를 처음 추진한 이 도시의 전 시장이며 브라질의 저명한 그람시 연구가인 라울 폰트는 참여예산제가 “중앙정부의 권력과 자본의 힘에 대항해 대중을 일으켜 세우고 민중 민주 정부의 건설로 나아가는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러시아의 좌파 논객 보리스 까갈리츠키는 포르투 알레그레의 경험을 아무 데나 이식할 수는 없으며, 자본주의 내에서 참여민

주주의 시도는 결국 일정한 단계에서는 결코 점진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토론의 분위기는 지난 몇 년 새에 세상의 이념 추가 어느 정도나 방향을 틀었는지 잘 보여 줬다. 이제 다시 진보세력은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NGO들이나 프랑스 사회당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참여 때문에 야기될 수밖에 없는 모호한 수사나 이념의 물타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문제 제기와 정정의 노력들이 있었다. 가령, “시민사회”라는 모호한 말을 대신해 많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더 이상 시민사회를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대회 시작 전에 촛스키는 “세계사회포럼이 새로운 인터내셔널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 많은 이들은 이 학자의 지나친 이상주의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2차 대회가 끝난 지금, 사람들은 주저 없이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말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 정도의 규모가, 그 정도의 수준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때가 됐다.

이제는 ‘다른 세계’의 적들을 직시할 때

초기에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시작했던 세계사회포럼은 이제 매년 열리는 인류의 축제로 정착했다. 앞으로 한 동안 이 정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곳으로 브라질 남부만한 데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아메리카 제국의 공안 한파가 휘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세계사회포럼은 불과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역량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제2, 제3의 포르투 알레그레가 등장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세계 민중의 행동의 날을 갖자고 제안해 박수를 받은 한국도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임을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세계사회포럼 2차 대회가 암시한 우리의 미래가 꼭 장밋빛만은 아니다. 첫번째로 주시해야 할 것은 세계사회포럼이 보여 주는 사회운동의 생명력과 그것을 대변해 줄 정치적 대안 사이에는 커다란 ‘어긋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발산하는 활력과 다양성에 부응하는 정당이 세계에는 브라질 노동자당 정도뿐이다. 세계사회포럼 이전에 노동자당이 추진하던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치세력간 연대 시도인 ‘상파울루 포럼’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 등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난 뒤의 성과물이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씁쓸하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두번째로 직시해야 할 것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구호의 반대쪽 면이다. 우리가 “대안이 없다”는 자조에서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 “다른 세계”의 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세계사회포럼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 노동자당이 여당으로 있는 상파울루 주에서 노동자당 지도자들에 대한 살인 테러가 계속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던 적의 실체를 다시 보여 주었다. 그리고 세계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 순간, 그 적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임을 우리는 목격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과제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사회포럼 2차 대회는 전 세계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케 했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뜻깊은 계기였다. 

엔론, 미국판 연줄 자본주의

정형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기업 비리다. [미국식] 기업 문화의 정직함과 투명성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대다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금융 제앙은 이미 한 대기업의 실패를 넘어섰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패다.”

최근 <비즈니스위크>는 엔론 사건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 대기업의 상징이자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성공작으로 거론됐던 엔론은 이제 언급을 삼가야 할 대상이 됐다. 엔론의 성장에서 윤희유 노릇을 했던 워싱턴의 정치인들 역시 이제는 엔론과 거리를 두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엔론의 몰락은 탐욕, 사기, 정치 권력과 의 뒷거래로 얼룩진 뻔한 스토리다. 미국에서 일곱번째로 큰 기업이 대규모 장부 조작과 막대한 부채, 정치적 뒷거래, 온갖 사기 사건에 휘말려 파산했다. 엔론의 흥망성쇠는 자본주의 자유시장의 축소판이다.

규제완화

엔론은 1985년에 구식 천연가스 송유관 업체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엔론의 설립자 케네스 레이(워싱턴에 많은 줄을 대고 있던 전직 연방 관료)는 전력 산업의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을 이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엔론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싸게 공급받아 기업과 가정에 비싸게 되팔았다. 엔론은 곧 신경제와 규제 완화, 자유시장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엔론의 성장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 덕분이었다. 엔론은 미국의 모든 천연가스와 전기 거래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지배력을 이용해 2000년에는 캘리포니아의 전기 요금을 거의 4배로 올리려 하기도 했다.

사실,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엔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엔론이 에너지 공급업체뿐 아니라 정치권을 공격적으로 매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우익 이데올로그들은 엔론에 톡톡히 ‘공헌’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엔론은 에너지 부문에서 거둔 성공을 석탄·제지·플라스틱·금속·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도 재현하려고 했다. 1990년대 말에는 인터넷 ‘대역폭’ 사업에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광통신 네트워크가 실수요보다 33배나 과잉투자됐던 것이다.

엔론은 자유시장의 무질서를 이용해 거침없이 성장했지만, 똑같은 자유시장의 무질서 때문에 파산과 몰락을 겪게 됐다.

장부 조작

엔론은 부채가 늘어나자 이를 수많은 비공식 ‘자회사’에 은폐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경영진은 엄청난 돈을 긁어모았다.

3천5백 개가 넘는 엔론의 자회사 중 9백여 개는 케이먼 제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세운 회사였다. 엔론은 이들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하는 수법과 기타 기술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최근 4년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오히려 3억 8천2백만 달러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까지 확보했다.

엔론은 회계장부 조작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2000년에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엔론의 회계감사 비용으로 받은 돈은 2천7백만 달러였다. 게다가 ‘경영 컨설팅’ 대가로 2천8백만 달러의 돈을 더 받았다.

엔론이 파산하자 전문가들은 엔론의 장부 조작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결산을 그럴 듯하게 보이게 위해 수치를 조작하는 일은 흔하다.

더욱이 엔론이 이윤을 많이 벌 때는 어느 누구도 그런 장부 조작을 문제삼지 않았다. 9월 말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증권사의 엔론 담당 애널리스트 17명 중 16명이 엔론의 주식을 ‘매수’ 추천 또는 ‘강력 매수’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엔론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10월에 레이는 당해 연도 3분기 손실이 6억 1천8백만 달러라고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숨겨둔 부채를 고려하면 회사의 가치가 12억 달러나 줄어든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몇 주 뒤에 엔론의 경영진은 이전 5년 간의 소득이 5억 달러나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11월에 소규모 경쟁업체인 다이너지가 엔론을 인수하겠다고 막판 제의를 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12월 4일 레이는 파산을 선언해야 했다. 사상 최대의 파산이었다.

그날 엔론 노동자 4천 명이 해고됐다. 하지만 엔론 경영진과 노동자들 사이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랐다. <뉴스위크>는 “가장 큰 피해는 퇴직금과 연금이 사라져 버린 무고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엔론의 최고 경영진은 부도 전에 이미 11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고, 반면에 퇴직금이 자사주에 잠겨 버린 노동자들은 13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최고 경영인과 엔론 노동자의 평균임금 차이는 531 대 1이었다.

정경유착

1997년에 금융 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했을 때, 미국의 체계는 ‘연줄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은행 등과 결합된 기업 경영진들이 장부 조작 등을 통해 금융 문제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도 ‘연줄 자본주의’와 다름 없으며 엔론이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엔론은 워싱턴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돈을 뿌렸다. 지금 부시는 엔론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엔론 사건이 터진 후 부시는 ‘엔론’이란 단어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 또, 텍사스 주지사 선거 당시 레이가 부시의 경쟁자였던 앤 리처드를 지지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부시와 레이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사이다.

아르헨티나의 전직 장관에 따르면, 1988년 당시 아버지 부시가 부통령을 지낼 때 아들 부시는 3억 달러 상당의 송유관 계약을 엔론에게 선사하려고 갖은 로비를 벌였다. 아들 부시는 아버지가 부통령 이던 시절부터 레이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주지사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엔론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 그 대가로 그는

텍사스 주의 에너지 규제 완화를 지원했다.

부시는 백악관에 가서도 여전히 엔론의 친구였다. 부시 정부의 각료 수십 명이 엔론의 주식을 배당받았고 그 중 몇 명은 지난 1월에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부시의 경제수석비서관 로런스 린지,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쥘릭, 육군장관 토머스 화이트도 포함돼 있다.

현직 부통령 딕 체니는 11월에만 엔론의 이사와 여섯 차례 만났으며, 엔론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10월 16일 전에는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 엔론 경영진은 부시 정부가 은행의 채무상환 요청에 개입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엔론은 백악관뿐 아니라 상원의원 71명, 하원의원 188명에게도 돈을 주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엔론이 사용한 정치자금 240만 달러의 대부분은 공화당이 받았지만, 일부는 민주당으로 흘러들어 갔다. 영국 황실과 토니 블레어 정부도 엔론의 자금을 받았다. 엔론이 진출한 세계 각지의 지배자들은 모두 로비의 대상이었다.

자본주의

엔론 게이트는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정경유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엔론 파산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항상적으로 동반하는 주기적 경기후퇴의 진정한 원인이다.

호황과 불황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이다. 개별 기업은 경쟁에서 다른 기업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의 감소를 각오해야만 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확장하던 기업은 갑작스런 후퇴와 추락에 직면하게 된다. 엔론처럼 지나치게 확장한 기업이 최초의 희생자가 된다. 살아남은 기업은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로 대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을 뽑아 낼 수만 있다면 무기를 생산하는 데도 수십조 원을 낭비하지만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할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도 뒷전으로 밀려난다.

문제는 이윤 체제 자체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상적인 싸움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한 더 큰 투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

아르헨티나는 신자유주의 파산의 결정판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일 두알데 대통령이 예금 인출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히자 아르헨티나 주요 도시들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생필품을 살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예금 인출 제한 조치가 위험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 그러자 시위대는 “모든 정치인은 물러나라”, “우리 돈을 돌려 달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대중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저녁 8시에 광장과 공원, 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서로를 조직한다. 주민들의 대중 의회들이 무더운 여름날 밤에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지역의 대중 의회가 회의를 소집하면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의 시청률이 하락할 만큼 그 열기가 뜨겁다.

아래로부터 등장한 운동은 위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보여 주고 있다. 살타, 코르도바 등 주요 도시들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실업 노동자들의 전투적 대중운동인 ‘피케테로스’(piqueteros)가 행진을 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오기도 했다.

살타에서는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대들이 부패 중식과 은행 계좌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13퍼센트 삭감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태로 돌려라고 요구했다.

‘피케테로스’

아르헨티나를 뒤흔든 운동의 핵심에는 상이한 사회

집단들이 모여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피케테로스다.

1990년대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전면적인 사기업화를 추진하자 실업자들이 폭증했다. 이 실업자들이 대량 해고에 맞서 벌인 운동이 바로 피케테로스다.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 수는 네 명 가운데 한 명 수준이다.

한때 아르헨티나의 생활수준은 유럽과 비슷했다. 하지만 실업자들이 폭증하면서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거 피케테로스로 몰려들었다.

세계 최대의 식량 생산국인 아르헨티나가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비극적인 역설이다. “빵과 일자리”는 피케테로스의 주된 요구가 됐다.

1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중간 계급 사람들은 피케테로스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중간계급이 완전히 파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 사태에 대한 분노가 과거에는 서로 대립하던 여러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더욱 급진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피케테로스 대열이 지나가더라도 주민들은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중의 행동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주민 대중의 회다. 주민 대중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공개적인 광장에 모여 토론하고 활동을 조직하는 기구다.

노동 계급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대중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노동자들이나 실업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대중의회는 노동자 밀집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 계층이 혼재된 지역이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지역에도 대중의회가 있다.

대중의회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많은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수백 명이 모이는 회합이 열리곤 한다. 비야 델 파르케 지역 대중의회에는 3백 명이 참여했고, 타르타갈 지역 대중의회에는 1천 명이 참여했다.

대중의회

대중의회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도 형성돼 있다. 그리고 대중의회에서 주로 제기하는 요구는 은행 예금 동결 해제, 은행과 사기업화한 기업의 재국유화, 일자리 창출, 식량 보조 등이다. 이러한

당면 요구들에는 대중적인 불만이 배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바이아 블랑카에서 한 항의 시위자가 한 말이다. 코르도바에서도 한 시위자는 “우리는 새로운 공화국을 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외쳤다.

일부 대중의 회에서는 외채의 원리금 지급 중단과 은행 및 산업의 국유화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색조가 가미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외국 상품 불매 운동과 함께 “국수주의”에 대한 호소가 그것이다.

하지만 산 크리스토팔과 보에도의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이곳 대중의회는 임금 삭감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과 실업자와 하루 12시간 맞교대를 해야 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했다.

보에도와 산 크리스토팔의 실업자와 학생과 노동자들은 거대한 대열을 이뤄 5월광장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이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러한 대중의회와 아래로부터 형성된 운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적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조직과 운동은 사회를 대중의 이익에 맞게 개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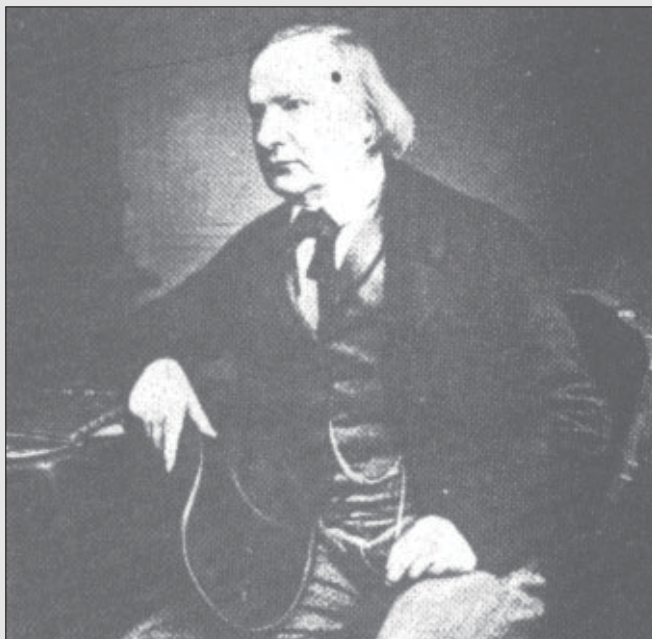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운동이 승리하려면 강력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은 결정적인 투쟁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 세력들을 극복하려면 조직 노동자들의 거대한 힘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주요한 노동조합 연맹 가운데 하나(CTA)는 가끔씩 항의 시위를 지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두 연맹(CGT와 MTA)은 페론주의 정당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일부 조직 노동자들은 자기 지도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항의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르도바에서는 지자체 노조 대표단 상당수가 항의 시위에 참가했으며, 산타페에서는 수천 명의 교사들이 항의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또, 대중의회의 지역간 회합에서는 처음으로 철도와 통신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대중 운동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는 노동자 계급의 잠재력을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희망으로 갈지 야만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문학적 대변자



올해 2월 26일은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가 태어난 지 2백주년이 되는 날이다.

위고는 소설 《레 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추》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다. 그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인물이다. 점잖다기보다는 기이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로 여겼고, 예수와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주장했다. 딸이 죽었을 때는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신에게 항의하는 시를 쓰기도 했다.

위고는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형성된 낭만주의 사조를 이끌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낙관을 갖고 있었다. 주로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창작된 그의 시는 풍부한 상상력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고는 인류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갖고 대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이기도 했다. 그는 노예제도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또, 억압당하는 민족의 권리를 옹호했다. 그는 언제나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다.

위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레 미제라블》(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에는 위고의 이러한 사상이 잘 나타

나 있다.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냉혹한 법의 처벌보다는 관용과 자비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의 각성과 변모를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동기에 있지 않고 사회에 있음을 작가는 고발한다.

장발장에게 각성의 계기를 제공했던 미리엘 주교의 자비는 이후에 장발장이 자신의 삶에서 지키고자 하는 철칙이 된다. 미리엘 주교나 장발장이 베푼 관용과 자비는 범죄자와 악인을 계몽시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인물로 만든다. 위고는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관용과 자비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법에 의한 처벌은 더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해 낼 뿐이다.

위고는 《레 미제라블》을 통해 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합리적인 법과 정부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하지만 법이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 없이 제정된 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법은 지켜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위고는 인식하고 있었다.

위고의 젊은 시절은 프랑스가 몇 차례의 혁명을 통해 근대 국가로 거듭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세력은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이 계급의 일원이었던 위고는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에 따라 제정된 법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려면 냉혹한 법 집행과 처벌보다는 관용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법에 대한 위고의 견해와 함께 《레 미제라블》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이는 장발장이 테나르디에의 억압으로부터 구해 낸 코제트를 통해 제시된다. 코제트처럼 불행한 출생 환경을 가진 소년일지라도 제대로 된 교육만 받는다면 훌륭한 숙녀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작가는 보여 주고자 했다.

위고는 사회의 진보를 확신했으며 늘 가난한 자의 편에 섰다. 그러나 그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이해하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공화주의의 신봉자였고 자유주의의 옹호자였다. 그는 1848년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적극 개입했고 1871년에 파리가 노동자 계급의 손에 들어왔을 때는 브뤼셀로 도망갔다.

위고의 정치 사상은 어떤 원칙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공허한 수사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무정부주의에 대한 강력한 증오, 그리고 민중에 대한 자애롭고 심대한 사랑”같은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대중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위였던 폴 라파르그는 “위고의 기회주의적인 공화주의는 계급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에 ‘실제의 장애물’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작가로서의 위고는 1789년부터 1848년까지

거둬온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전통이 낳은 최상의 것을 대표한다. 위고의 작품들은 이 시기에 형성된 ‘자유·평등·박애’와 같은 가치들뿐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는 사회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위고가 제시했던 해답의 옳고 그름에 관계 없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던져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법은 과연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제정됐는가? 법은 평등하게 적용·집행되는가? 법에 의한 처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범죄는 왜 생겨났고 어떤 근거에 의해 규정되는가? 우리는 부당한 법에 맞서 그것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김학균

영 화 평

블랙호크 다운

넉다운된 진실



<블랙호크 다운>은 감독 스스로 인정했듯이 9·11 테러 이후 애국주의 흐름을 타고 박스 오피스의 성공을 노린 전쟁영화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 등 이전 영화들에서 보여준 스펙터클과 시각적 이미지를 훨씬 더 발전시켰다. 이 영화에서 그런 재능을 전투의 공포·폭력·혼돈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미 육군 최정예 부대 델타 포스 —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테러조직 — 와 레인저 부대가 벌인 군사작전을 다루고 있다.

1993년 10월 3일과 4일, 6백만 달러 짜리 무장헬리콥터 블랙호크 2대가 소말리아 민병대가 쏜 싸구려 로켓 유탄에 맞아 추락했다. 적진에 떨어진 미군과 소말리아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9명의 미군이 죽고 1천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들이 죽었다. 미국 정부는 깜짝 놀랐고 서둘러 미군을 소말리아에서 철수시켰다.

영화 속에서 이 작전의 총지휘관은 “도시 전체가 그들 [미군병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안달한다. 그러나 도 대체 왜 도시 전체가 자기들의 은인이자 보호자를 자처하는 미군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기를 쓰고 덤뱌을까? <블랙호크 다운>은 아주 교묘하게 이 질문을 피해간다.

오만

영화 전반에서 이 질문은 완벽히 사라졌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영화는 편리하게도 미국과 UN의 확실성을 망각해 버렸다.

역시 주요 쟁점인 미군 주둔 문제도 소말리아인들이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에 파묻혀 스리슬쩍 넘어간다. 이것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이 광신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미국의 선동을 떠오르게 한다.

용감한 미군?

<블랙호크 다운>은 ‘용감한 미군 병사들’의 신화를 보여준다.

전투가 끝나고 델타 요원은 이 짓을 하는 이유가 오직 “전우에” 때문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영화의 주인공 레인저 하사(조시 하트넷)도 “전우에”를 찬양하는 말로 영화를 마무리한다.

영화는 시종일관 미군 병사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개성을 보여주기에 애쓰는다.

심지어 소말리아 사람들을 닮치는 대로 사살하다가 총알이 떨어져 그들에게 몰매 맞는 블랙호크기의 조종사마저 동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필사적이다. 원작인 마크 보우든의 책에서는 접할 수 있는,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

한 미군의 무차별 사격과 학살은 단 한 컷도 나오지 않는다. 제작진은 모가디슈 거리에서 군중이 미군 시체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1993년 10월 4일 오후부터 CNN이 30분 간격으로 계속 방영한 장면—을 영화에선 일부러 생략했음을 인정했다. “너무 충격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썸비들

그러나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수백 명의 소말리아인들이 미군에게 살해되는 장면들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것은 미군과 싸우는 수천 명의 소말리아인들이기 때문이다. 미군 병사들이 느끼는 공포와 비극은 잘 묘사된 반면, 소말리아인들은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검은 피부의 살아있는 시체(썸비)들처럼 묘사된다.

<블랙호크 다운>은 여느 전쟁영화와 마찬가지로 “적”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실제로 민병대원으로 모가디슈 전투에 참여했던 소말리아인은 영화를 본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영화에는 우리 언어, 음악, 문화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 거리와 건물을 카피하고 소말리아인의 호전성을 끝도없이 보여 주었다.”

<블랙호크 다운>은 “전쟁이 지옥”임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이 전쟁이 비록 실패했지만 미국이 벌인 “좋은 전쟁”임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미국이 “선한 의도”로 “좋은 전쟁”을 벌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영화의 결말 부분에는 미군과 소말리아인의 정확한 사망자 수를 대조하는 자막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영화잡지와 평론가들은 대부분 이 영화에 편죄부를 준다. 더 나아가 미국 대외정책을 냉소·비판한다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블랙호크 다운>은 기껏해야 미국의 다른 전쟁 영화들처럼 극우 고립주의자들—팻 뷰캐넌, 제시 헬름스 같은 자들—의 견지에서 점잖게 말할 뿐이다. “미국은 자신의 일이나 신경 써야 한다.” 그러니 “타 국민들의 전쟁에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블랙호크 다운>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 영화다. 반전영화는 커녕 워싱턴의 매파들을 비웃는 영화도 아니다. 최근 헐리우드가 내놓은 <에너미 라인스>, <콜렉트럴 데미지>처럼 역겨운 인종주의·애국주의 영화들 중 하나일 뿐이다.

정권

공공의 적

누가 “공공의 적”인가?

최근에 개봉된 영화 ‘공공의 적’을 보면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아시아게임 복싱 은메달리스트 출신의 강력계 형사 강철중은 믿는 거라곤 주먹밖에 없다. 그는 돈 받고 지명수배자를 풀어주고 마약조직에게서 마약을 훔치며, 피의자들이 허위 자백을 할 때까지 죽도록 패는 등 강패보다 더 한악당이다.

그러나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뻔한 거짓말과 파렴치한 위선에 분노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강철중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솔직하고 시원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 그가 영악한 펀드매니저이자 사회의 엘리트인 살인마 조규환을 막무가내로 쫓아다닌다.

잘 나가는 증권사 이사인 조규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쓴다. 그는 식당에서 부딪혀 자기 옷을 더럽힌 사람을 죽이고, 증권에 투자한 돈을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부모를 죽인다. 사실, 형사 강철중과 살인마 조규환은 같은 부류의 인간이다.

그러나 강철중이 조규환을 만나자 악이 선으로 바뀌어 버린다.

조규환이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신흥 자본가였다 돈 때문에 부모도 살해하는 패륜아라는 사실은 가진 게 주먹밖에 없는 강철중을 관객의 편으로 만들어 준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온갖 게이트의 주범인 정치인, 사장들에 대한 분노가 평소 내면에 깔려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사회의 엘리트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공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살인마를 응징하는 악질 형사를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독의 의도를 안다면 그런 대리만족감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 영화를 만들며 관객들도 ‘나쁜 놈은 죽어야 한다’는 마음이 절로 들도록 다소 선동적인 분위기를 담았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원조고 제나 성폭행

으로 잡혀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말짱하게 경찰에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막 화가 났다. 사채업자든 패륜아든 공공의 적은 아예 때려 없애자는 거다. 영국 갔을 때, 길에서 경찰이 몽둥이로 행인 한 명을 죽도록 때리는 걸 봤다. 그런데 지나는 사람들이 맞을 짓을 했다면 웃고 지나가던데, 난 이런 공권력을 기대한다.”

반자본주의 시위대에게 충격을 가하고 민중에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공공연히 행사하는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강우석 감독의 선동은 영화를 보면서 느낀 통쾌함을 오싷한 공포로 변하게 한다.

이원재



육식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시공사

1 986년 맥도
날 드로 대

표되는 패스트푸드에 반대해 슬로우푸드 운동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정말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SBS의 ‘잘먹고 잘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채식 열풍이 우리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산모의 모유에서 허용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다이옥신(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1그램이면 몸무게 50킬로그램의 성인 2만 명을 죽일 수 있다)이 나오는 현실에서 매일 티스푼 두 개 분량의 화학성 식품첨가제를 먹어야 하는 현대인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호사스런 사치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노동의 종말》, 《엔트로피》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은 육식 위주의 음식 문화에 대한 비평서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몇 주 동안 의학·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리프킨은 육류 중에서도 단백질 사다리 꼭대기에 위치한 쇠고기 식생활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리프킨의 논점은 단순하다. 쇠고기 대량 소비는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다. 쇠고기 위주의 육식 문화는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를 병들게 만들며 기아를 부채질한다. 따라서 육식이 아닌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바꾸자는 것이다.

소를 뜻하는 “cattle”은 자본을 뜻하는 “capital”과 어원이 같다. 근대 산업사회 이전만 해도 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고 소수 유목민이나 특권 지배 계급의 음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대규모 축산 단지 건설을 위해 인디언들을 쫓아내려고 인디언들의 식량이 되는 버펄로를 대량 도살했다. 남미의 축산업자들은 열대우림 파괴를 저지하러던 치코 멘테스를 살해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는 12억 8천마리로 추산한다. 이 소들의 사육 면적은 전세계 면적의 24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어치운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의 70퍼센트가 소의 사료로 소비된다. 소의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을 인류가 섭취한다면 1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한 쪽에서는 수백만의 인류가 기아로 죽어 나가고 인류의 다른 일부는 과도한 육식 때문에 암, 당뇨병, 심장질환으로 죽어 간다. 1984년 에티오피아는 기근으로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농경지의 대부분을 가축 사료용 아마씨를 재배하는 데 사용했다.

소가 처음부터 곡물을 먹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질이 촘촘히 박힌 부드러운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소에게 옥수수수를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는 원래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곡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위에 농양(고름)과 같은 질병이 생긴다. 그러면 그 쇠고기와 함께 농양도 갈려 햄버거 패티가 된다.

대규모 축산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실가스의 12퍼센트를 차지하며 열대우림을 파괴한다.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0.9제곱미터의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

리가 먹는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대략 75킬로그램의 생명체가 파괴되고 20~30종의 식물, 100여 종의 동물이 파괴된다.

현대 축산업에서 소가 사육되고 도축돼 식탁에 오르는 과정은 인간의 생명이거나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축산업자들은 어린 송아지를 유순하게 길들이기 위해 거세를 하고 화학연고제로 뿔을 태운다. 6개월에서 11개월 동안 성장한 뒤에 살을 찌우기 위해 기계식 비육장으로 보낸다. 살을 찌우기 위해 소들은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콘크리트 우리에 갇히고 최단 기간에 무게를 늘리기 위해 항생제와 살충제, 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가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물질들은 그대로 인체에 축적되어 암을 발생시킨다. 심지어 축산업자들은 소를 살찌우기 위해 마분지와 신문, 톱밥, 폐지나 닭의 분뇨를 사료로 먹이고 시멘트가루도 먹인다.

1904년 업튼 싱클레어는 <정글>이라는 소설에서 시카고의 비위생적인 도축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미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소설이 준 충격으로 도축 과정의 위생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그 뒤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검역 제도와 위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그 결과 “취들은 모두 냉각기 위에 올라가 있다가 밤이면 고깃덩이 위를 내달리며 미구 굶아 먹는다.”

이 책은 축산업의 형성 과정, 쇠고기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통해 이윤과 시장 효율성 위주의 사회가 어떻게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의 폭로가 워낙 생생하고 다채로워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상당 기간 고기를 먹기가 어려울지모르겠다.

그러나 제1세계 선진국 노동자들의 육식 문화 그 자체가 기아의 원인이라거나

쇠고기를 먹는 것이 성차별과 국수주의, 계급 차별을 낳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열렬한 채식주의자였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개인적 선택일 수는 있지만 인위적인 단백질 사다리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식품 산업 구조가 존재하는 한 인류 전체가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비현실적 대안이다. 일반 채소보다 가격이 세 배나 비싼 유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전한 식품을 먹고자 하는 싸움은, 이윤을 위해 건강과 환경에 해롭고 비위생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본주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더 큰 투쟁과 맞물려야 한다.

임미정

프리카토피아를 넘어서



노엄 촘스키 외
백의

우리가 생각
하는 유토피아

피아는 빈곤, 착취, 억압이 없는 곳이다. 반면 현재 우리는 60억 인구 가운데 55억 명이 불평등과 박탈감을 강요받는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 언제부터가 우리는 성장 신화라는 주술에 최면이 걸린 채 우리의 권리를 잃어가면서 살고 있다.

일자리와 자연 환경, 공동체적 삶, 정치·사회·문화의 자율성, 사생활, 그리고 우리 유전자에 대한 권리까지 시장에 내맡겨졌다.

우리는 언제쯤 가야 효율과 합리성의 가면을 쓴 경제적 놀음에 불과한 신자유

주의에 저항해 이윤보다 인간을 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을까?

진보적 지식인들이 프랑스 진보 잡지 <르몽드 디플로마띠크>에 기고한 글을 묶어 펴낸 《프리카토피아를 넘어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적자인 인터넷과 유전자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를 고발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대안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자고 촉구한다.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에게 사이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든 질병의 구원 투수로 혁명적 게놈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각종 매체에는 내가 원하는 상품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해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순수하고 완벽한 시장이라는 자유주의 유토피아를 위해 시장 논리에 장애가 되는 모든 집단주의적 구조를 파괴한다. 신자유주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경제적 단물만 빨아먹으면서 신자유주의에 반발하는 자들은 짓밟는다. 우리가 “혁명의 시대는 갔어” 혹은 “강자가 모든 것을 가지니 어찌겠어?”라는 패배주의에 젖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완전 고용과 해고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노동자가 되거나, 짜고 치는 고스톱 판과 같은 정치권에 동원되는 ‘하루살이’ 유권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세계화나 과학의 유토피아 같은 허울좋은 이념들을 우리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지겹다. 또한 국제 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사실은 불평등의 심화와 자본과 권력의 집

중을 강화시켜 우리 삶을 파탄내는 “오적”인데도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호형제 행세를 하면서 세계를 통제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세계적인 실업, 사회복지 후퇴, 사기업화로 인한 삶의 황폐화를 우리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제 금융투기와 세운 동연합을 통한 공공부채 전액 탕감과 투기성 금융 자본에 대한 토빈세 부과를 위해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간의 기본권인 노동권과 교육·환경·사회보장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파업이나 시위 같은 사회 투쟁의 무기를 통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의식이 부족한 서비스 부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국가나 민족의 특성에 간혀서 연대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양하고, 노동운동가들이 피지배자로부터 복종을 얻어 내려는 사고방식과 단절해야 한다.

넷째, 금융권력, 다국적 기업 그리고 언론이 퍼뜨리는 신자유주의만이 대안이라는 속명론과도 결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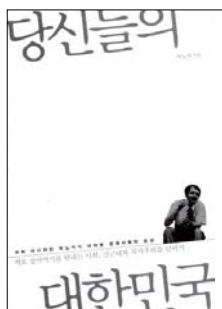
이 책은 아쉬운 점도 있다. 유럽, 특히 프랑스 중심적 사고가 여기 저기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미국과 세계은행이 그들 자신만의 이해에 따라 세계질서를 지배하려는 것에 반대해 유럽 차원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족·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세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럽 중심의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모순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쁠 것이고, 하물며 대안은 더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행

동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야 하는 당위를 역설한다. 이윤 추구의 광기만 존재하는 프리바토피아(사유화 천국)는 사회 불평등과 횡포에 맞서려는 의지와 행동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김정숙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한겨레신문사

우 리 나라에
서 외국인

은 피부색에 따라 사뭇 다른 대접을 받는다. 한국인의 피부보다 하얀 편에 속한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불행히도 검은 편에 속한다면 거리를 쏘다니는 게 고역이다.

더구나 후자에 속하는 절대 다수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고강도의 노동착취를 감내해야만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들에게 '귀화'란 하층민 딱지를 떼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한편으로 그 기회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단적인 예다.

귀화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자, '노동법', '재판' 등 어려운 한자어를 구사할 수 있고 '산유화' 저자까지 알 정도로 박식(?)한 자에게만 허용된다.

박노자에게 귀화 절차는 "자본주의 국가가 계급적 차별과 억압을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마르크스주의의 명제를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백인인데다 한국학 전공자요 대학 교수로 어렵지 않게 귀화인이 된 그는 한국 사회가 자신과 함께 귀화시름을 치렀던 아시아·아프리카인

들을 배척하지 않는, 좀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그러한 염원에서 발간한 책이 바로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다. '서로 잡아먹기를 탐내는 사회, 전근대와 국가주의를 넘어서'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한국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그 나름의 시각으로 서술한 책이다. 더불어 남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 사회를 수시로 거론하는 균형감각도 갖추었다.

박노자는 세계 체제론에 입각해 한국을 준주변부 국가(비교적 고부가가치 소비재의 수출국이자 중심부 국가로부터의 자본·기술 수입국)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의거해 정치·사회·문화의 전반적인 구성을 설명한다.

준주변부 국가인 한국에서 "대학 못하고, 직장 못 구하고, 재산 못 모은" 주변층에 대한 국가와 주류사회의 태도는 극히 폭력적이며 멸시적이지만, 학력·직업·재산을 다 갖춘 중심층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대하다.

영어공용어화론이나 학위 수입 풍조에서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는 중심부 사회를 끊임없이 추종하려 하면서도, 이주노동자나 중국과 중앙아시아 등지의 가난한 교포들은 쌀쌀맞게 무시함으로써 주변부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즉 한국은 사대주의와 멸시가 뒤섞인, 오리엔탈리즘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을 박정희 탓으로 돌린다. 박정희는 이 땅에서 근대화를 일궈낸 인물이자 역설적이게도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토착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와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 획득'에 공이 크다는 박정희 옹호론자들의 논리를 북한 정권의 체제 변호론에 빚대어 비판한다.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 동원을 통해 민중들

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공업화와 강군 건설에 성공하고 남쪽을 앞질러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북한 정권의 논리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박정희식 조국 근대화론은 한국의 전근대적 과거와 외국의 전체주의적 현대 문화가 얹힌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이순신 동상이다. 이 동상은 대외적으로는 열강과 군국주의에의 편입을, 대내적으로는 정통성과 충성 덕목의 강조를 의미한다. 정권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아류작인 패거리 문화는 지역주의를 절대화한 정치판과 선민의식·배타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종교계에서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곳이 바로 군대다. 보수 정치인이 다스리고 재벌이 소유하는 권위주의적인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보스에 맹종할 충견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일종의 양견장 역할을 한다.

박정희식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 전체에, 한국인 각자에게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다. 대학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다. 대학 또한 한국 사회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보적이고 반체제적인 듯하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대와 마찬가지로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상명하달의 원칙이 지배한다. 학생들간의 관계 역시, 나이·학번에 따른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종이 강조된다.

한마디로 대학은 청년들에게 규율과 복종을 가르치는 사회 장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교수들의 종로뿔을 해야 하는 조교들, 무관심과 따돌림 속에서 과다하게 노동해야 하는 시간강사들을 보자면 대학 사회 안에도 주변층이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박노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날카로우면서도 섬세하게 짚어낸다. 요컨대 그가 일관되게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전근대적 규범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동의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동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미 근대적 정신이 박힌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과연 우리 나라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근대'란 무엇이며, 만약 그것이 그가 말한 평등과 인권의 보장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진정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의 책이 이런 의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족주의·국가주의·패거리 문화·군국주의·인종주의 등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들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양인애

담배, 돈을 피워라



타라 파커-포프
들녘

스트리트
<월 저널> 기자

타라 파커-포프가 쓴 《담배, 돈을 피워라》는 담배 산업에 대한 생생한 진실을 담고 있는 책이다.

담배를 피울 때 많은 사람들은 위안을

얻는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면서 그들 이상으로 흡족해 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담배 회사 사장들이다. 흡연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부와 권력도 늘어날 것이다.

담배 산업은 자본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3천억 달러어치의 담배가 소비된다. 이는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하는 액수다. 이윤율도 다른 산업보다 2~3배 높은 40퍼센트에 달한다.

담배 산업의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은 광고다. 담배 산업은 총투자액의 15퍼센트를 광고에 투자한다.

하지만 담배 산업에는 근본적인 난점이 하나 있다. 바로 사람들이 생리적으로는 담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카콜라 사는 음료수를 팔 때 사람들이 왜 마셔야 하는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수분 섭취는 당연한 생리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코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담배를 처음 필 때 구역질이나 두통 등의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담배 산업에서 광고는 매우 중요하다. 담배 회사들은 담배에 자유, 성공, 세련됨 등의 이미지들을 담으려 애쓴다.

말보로는 카우보이 이미지를 통해 남성미를 강조했다. R.J. 레이놀즈는 카멜 담배를 어린이에게 팔기 위해 조 카멜이라는 캐릭터로 만화 광고를 만들었다. 필립 모리스는 영화 <슈퍼맨 II> 제작에 4만 2천5백 달러를 지원하고 그 영화에 간접 광고를 했다.

한편 미국 담배 회사에게 시장을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국의 흡연율이 계속 낮아져 28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제3세계에 진

출하는 것은 사활적인 일이다. 미국의 '빅 토바코'(미국의 거대 담배 회사들)는 제3세계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한다. 그런 로비로 제3세계의 담배 무역에 대한 규제들이 풀렸다. 1971년부터 미국에서 TV 담배 광고는 금지됐다. 그러나 미국은 위선적이게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담배 시장을 개방하고 광고를 허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담배 회사들이 노리는 또 하나의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흡연을 빨리 시작할수록 끊기는 더 힘들어진다. 담배 회사들은 학교 주변 가게의 담배 진열을 강화했다. 억압당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은 숨막히는 사회에 저항하고 싶어한다. 담배 회사들은 그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담배에 저항적 이미지를 덧칠한다.

담배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사람들의 건강 따위는 무시해 버린다. 그들은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계속 부정했다. 담배산업연구위원회(TIRC)를 만들어 자기에게 유리한 연구를 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고분고분한 과학자·의사에게는 돈을 주었다. 반면 자기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원은 바로 해고해 버렸다. 미국 의학협회(AMA)는 이미 1950년대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발견해 놓고도 담배 회사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6개 담배 회사로부터 담배 연구 보조금으로 1천만 달러를 받았다.

담배는 폐암을 비롯해 수많은 암을 유발한다. 30~40대 흡연자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보다 5배나 높다. 담배 잎의 독성 때문에 담배 농장 노동자의 1.4퍼센트가 생담배병(GTS)에 걸린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현실의 고

통·불안·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 한다. 담배 회사들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악용해 자신의 배만 채우려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담배 산업의 진실을 훌륭하게 폭로하는 책이다.

승영

풀 하우스



스티븐 제이 굴드
사이언스 북스

“진화론에

서는 인류의 조상이 원숭

이라고 하는데, 그럼 먼 훗날에는 동물원의 원숭이도 인간처럼 진화할 수 있나요?”

진화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던질 법한 질문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진화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인간의 조상은 현재의 원숭이가 아니며 예전에 원숭이와 인간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화의 과정이 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방향성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바로 이러한 점, 즉 진화란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중심적인 진화론’을 비판한다. 진화를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진보와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진화는 어떤 실체가 움직여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풀 하우스)에 걸쳐 일어나는 변이의 확장이나 위축 현상, 즉 다양성의 증가일 뿐이다.

저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진화를 진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의 탓이 크다. 우리는 과학 교과서나 아동용 과학책에서 진화의 역사를 ‘어류-양서류-파충류-포유류의 시대’로 나누고 각각의 시대에 따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파충류의 시대에서는 하늘을 나는 공룡이나 물과 육지에 있는 공룡 몇마리를 그려놓은 그림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그림은 잘못된 개념을 퍼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서류의 시대든 파충류의 시대든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생물은 언제나 박테리아였다.

둘째, 저자는 통계학적으로 제시되는 수치들의 변화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라고 한다. ‘거짓말, 황당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세상의 3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다.

저자는 ‘왜 야구에서 4할 타자가 사라졌는가?’라는 문제와 소위 ‘술주정뱅이 모델’이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통계적 수치들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진화의 역사에서 고등한(?) 생물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점은 시스템 전체에서 다양성이 증가해 왔다는 저자의 주장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물이 초기에 박테리아와 같은 형태로 생성된 이후에 다양성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좀더 복잡한 생물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덜 복잡한 형태로 진행한다면 더 이상 생물이기를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저자는 진화에서 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되돌려 다시 비슷한 조건에서 반복한다 해도 인간이 탄생할 확률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인간의 탄생은 한순간 우연히 일어난 우주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악기 말에 공룡이 대규모로 멸종하고 그 이후 포유류가 증가한 것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도킨스나 에드워드 윌슨 등의 사회생물학자들을 ‘적응주의자’라며 비판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언어 능력은 그 능력이 갖는 장점을 획득하기 위한 적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가 커진 결과로 인해 얻어진 ‘우연의 부산물’일 뿐이다.

인류는 자신을 몹시 사랑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생명 전체를 대표하는 생물도 아니고 동물 종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곤충류의 대표도 아니다. 생명의 역사를 100년 된 커다란 나무로 보자면 인류는 2~3시간 전에 자라난 자그마한 가지에 불과하다.

《풀하우스》는 인류의 관습적인 오만을 뚫고 진화의 전체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어려운 주제와 달리 책은 아주 명료하고 재미있다. 이 책의 독자는 저자의 제안대로 “풀하우스 패를 이길 수 있는 로열스트레이트플러시 패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명진

툽니바퀴 상·하



존 그리섬
북@북스

법정 스틸
러의 대

가 존 그리섬의 새 소설 《툽니바퀴》가 나

왔다. 이번에도 역시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남은 여생을 플로리다 주 연방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는 전직 판사 세 명으로 이뤄진 ‘동업자들’. 이들은 자신들한테서 부와 명예를 빼앗은 법과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비열하고 추악한 사기극을 벌인다. 그것은 동성애자 잡지에 펜팔 광고를 내어 동성애자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것. 펜팔 대상자가 돈이 많고 잃을 것이 많을수록 ‘동업자들’의 이익은 그만큼 짝짤하다. 이 ‘동업자들’의 그물에, 대통령 후보가 된 아론 레이크가 걸려든다.

하원 국방위원장인 아론 레이크는 14년을 국회에 몸담았지만 워싱턴 바깥에서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가 자기 고향 주민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 예산 삭감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CIA는 그를 대통령 후보 비밀 리스트에 1순위로 올린다. 흰칠하게 잘 생긴데다 달변이며 골치 썩을 여자 문제나 마약 문제 따위에서 그 누구와도 비할 바 없이 ‘깨끗한’ 강경파 아론 레이크는 CIA의 마음에 꼭 들었다.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 돈세탁, 선거인단 매수, 냉전적 테마그들...

이 소설의 중요한 이야기 축을 이루는 아론 레이크의 선거 운동 과정은 마치 2000년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연상시킨다. 미국 기성 정치에 대한 그리섬의 풍자는 이전 작품들보다 더욱 생생하고 훌륭하다.

당선되면 국방비 예산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약속받고, CIA는 아론 레이크에게 선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동원해 주겠다는 거래를 성사시킨다. 냉전이 끝나 앞날을 걱정하던 군산 복합체들에게 “전쟁에 대비하시오, 적의 공격에 대비하시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

장!”이라는 광고 메시지를 퍼붓는 아론 레이크는 그야말로 구세주다. 군산 산업체들이 앞다퉈 그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한다.

아론 레이크를 당선시키기 위해 CIA는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경쟁자들을 경선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결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어두운 사생활 파일을 들추며 위협한다.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어 의원들을 매수해 지지 선언을 하게 만든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민주주의는 시궁창에나 처박으라지.”

아론 레이크는 전쟁 위협과 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인종주의를 이용한다. 심지어 CIA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수수방관한다. CIA는 이집트 주재 미국 대사관이 폭파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숨어서 지켜본다. 검은 연기, 무너진 건물터미, 산산조각나거나 불에 탄 주검들을 재빠르게 워싱턴의 선거 캠페인에 이용한다.

“더 많은 시신이 나와야만 한다. 처참할수록 더욱 좋다. 테러 공포는 더한층 현실감을 갖게 될 테니까.” 죽음과 피를 전쟁과 선거에 한껏 이용하려는 CIA의 연출은 지금의 조지 W 부시와 꼭 닮았다.

냉전주의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열광적인 지지, 엄청난 돈, 정치적 공포 덕분에 승승장구하던 아론 레이크가 ‘동업자들’의 사기극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CIA 국장 테디 메이너드는 아연실색한다. 누구든 털끝만큼이라도 쟁기는 게 있다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CIA의 촌촌한 정보망에 따르면, 아론은 1백 명의 상원의원, 50명의 주지사, 435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도덕적으로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다.

혹시라도 기분 나쁠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럴 것 없다. 공화당원 중 동성애자와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공언할 만큼 동성애자들에게 적대적인 부시를 비꼰 존 그리섬의 채치에 동성애자라도 그저 웃음이 절로 나올 테니까.

CIA는 하루 아침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아론 레이크의 비밀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살인까지 저지르며 필사적인 계임을 벌인다. 그에 비하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마약 사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청년 버스터를 탈옥시키는 ‘동업자들’에게서 오히려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조송희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이나미
책세상

국가보안
법을 자

기 지식보다 더 아끼는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같은 우익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 자유 탄압”이라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평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던 김대중은 왜 9백 명이 넘는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는가?

우리 나라에선 우익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탄압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은 한국 최초의 자유주의 경향이었던 개화파와 <독립신문>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보수주

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는 책이다.

친제국주의적 반민중적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독립신문>을 민족주의 경향으로 간주하곤 했다. 그러나 저자 이나미 씨는 <독립신문>을 자유주의 경향으로 규정한다. <독립신문>이 강조하는 ‘독립’은 “국가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자립’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은 “유교에 의해 경시되었던 이익 개념과 상업”을 높이 평가했다. 또,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을 강조하며,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중시했다.

그런데 자유주의 성향을 떠던 개화파들은 나중에 대부분 친일파로 돌아섰다. 이익 추구하고 경쟁을 숭상하던 그들은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즉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개화파들의 이런 주장의 논리적 기원은 ‘사회진화론’이다. 사회진화론은 “개인적·민족적 수준에서의 등급 매기기”를 통해, 서구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개화파들에 따르면 조선은 “개화”를 통해 서구와 닮아가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개화파들은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인종주의도 받아들였다. 이들은 유색 인종들의 외모, 성품, 풍속 등을 비하했다. 이리다 보니, 미국의 인디언 정복을 정당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이들은 당시 세계를 황인종과 백인종의 싸움으로 여겨, 황인종들끼리 연대해 백인에 대항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이 황인종을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아시아연대론’과 흡사한 주장이다.

또, 이들 개화파는 근본적으로 민중에 적대적이었다. 저자는 개화파들이 ‘민(民)’의 개념을 대체로 민중을 불신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민중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민중을 “그들이 바라는 문명 사회 [대의제 공화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세력”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중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감싸안을 수도, 그렇다고 그냥 내칠 수도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지배계급의 본질

이 책은 일제 시대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통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진지하게 제국주의에 맞서지도 않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결국 한국 지배계급이 옹호하는 ‘자유’는 진지한 의미의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재산 소유의 자유’일 뿐이다.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이러한 본질은 일제 시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독재 정권에 맞서기는 커녕 기업가들의 이윤 획득을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착했다. 김대중도 우익들에 타협하기 일쑤거나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에서 우익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다 보니, 진지한 자유주의자들이 염원하는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조차도 지배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 계급의 광범한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의 교훈은 지배 계급 내의 수구파와 개혁파는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이다. 책의 가치를 두 배로 활

용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올해 대선 때 민주당 내 개혁파를 지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정병호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



로자 룩셈부르크
책세상

로자 룩셈부르크가 쓴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는

개량주의를 해부하고 그 핵심 주장들을 반박하여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이정표 역할을 한 책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무명의 인물로 독일에 막 도착했던 1898년에서 1899년 사이에 이 책을 썼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독일사회당은 제2인터내셔널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의 반사회주의법이 사라진 1890년부터 이 당은 정치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타락의 중심 인물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었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현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마르크스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친 철저한 국제주의자였다. 그런데 베른슈타인은 1907년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문명화된 민족이 미개한 민족의 후견인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자는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 주장

이 당연시되던 독일사민당에서 수정주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이를 이끌었다. 마르크스주의 원칙들을 현대화한다고 주장했던 베른슈타인에 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반박은 직설적이고 통렬했다.

“정치권력 장악과 사회변혁 대신, 그리고 이에 대립해서 법률 개혁의 길을 찬성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같은 목표에 이르는 더 조용하고 확실하고 시간이 걸리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를 택한 것이다.”

현대의 베른슈타인주의자들인 유럽의 사회민주당 정치가들은 사회변혁이란 몽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체제 내에서 작은 성과들을 하나씩 쌓아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정부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전혀 훼손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의 지지자들을 배반했던 실패한 역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로자의 주장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해 주는 사례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나름대로 위기에 ‘적응’하여 그 고유의 모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본 집중의 결과로 나타나는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다란 혼란을 자아냈다.

룩셈부르크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주기에서 필수적인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본주의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가는 듯해도 그 표면 아래에는 모순이 엄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위기가 재발할 것임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베른슈타인의 헛된 낙관주의를 조롱했다.

군국주의

국가와 관련된 논쟁에서도 로자 룩셈

부르크는 뛰어난 예지력을 보여 주었다. 베른슈타인은 국회에서 노동자 의원들이 다수가 되면 사회주의로 평화적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로자는 국가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형태와는 달리 그 내용은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로자는 심지어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외관조차 지배계급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버려진다고 지적했다.

로자는 국가의 성격에 대한 이런 주장과 더불어 국가와 경제의 상호 침투를 분석한다.

로자는 국가가 “다른 민족 집단과 서로 경쟁하는 ‘민족’ 이익의 수호를 위한 투쟁 수단”이자 “금융 자본뿐 아니라 산업 자본의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이며 “노동 계층에 적대적인 자본의 지배를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로자는 제1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외교적 긴장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이 책을 썼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제1차세계대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늘날 조지 W 부시가 벌이는 전쟁의 동학을 설명하는 논리로도 손색없어 보인다.

로자가 베른슈타인에 대해 별인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노동자 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변화의 수단, 즉 노동조합과 그 지도자들에 기반한 정당을 제공해 주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서는 항상 무이며, 운동이 전부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는 노동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들이 사회민주당에게 표를 던지는 것만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로자는 비록 노동조합이 ‘투쟁의 학교’ 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자본주의

를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노동조합을 통해 사장의 이윤을 점진적으로 장악하는 일을 시지프스의 노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대중파업론》에서 시지프스의 노동에 대한 독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녀의 약점도 드러난다. 그녀는 개량주의의 조직적·사회적 뿌리에 대한 완전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로자는 베른슈타인의 기회주의가 “우리 당에 들어온 뾰뚱부르주아적 요소”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의 주요 지지자들을 단순히 ‘뾰뚱부르주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들 지지자들은 사장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 노동조합과 독일 사민당의 4천 명 관료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개량주의라는 오염의 원천은 개량주의의 조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중앙에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개량주의가 단지 노동조합과 당 관료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소외와 착취에 저항하며 나름의 저항 사상들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식은 모순적이고 불균등하며 개량주의로 곧잘 표현된다.

로자는 개량주의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당내 논쟁에서 결국은 패배했다. 비록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불후의 명작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개량주의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이 책은 그 개량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정구

저항의 세계화



크리스 하먼, 존 리즈
북막스

오늘날 우리가 살

고 있는 세계는 장기적 이행 과정에 놓여 있다 — 변혁이냐 야만이냐.

국제 지배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가 아무 도전도 받지 않는다던가?

우리의 세계는 야만으로 치달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국제 지배자들의 의제에 맹렬하게 저항한다면? 변혁의 희망이 싹트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돼 있지 않은 미래를 둘러싸고 세계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 자본주의적 세계화냐 반자본주의냐.

반자본주의 운동은 21세기 국제 저항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됐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놀라운 자생성, 다양한 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 '사상적 지도자들'의 선전 활동 등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운동이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적으로 간주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에둘러 일컫는 말이다. 기업 탐욕은 이윤 체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다국적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과 동의어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단순히 공장 폐쇄나 정리해고나 복지 삭감 하나하나에 반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결과는 물론 그 원인에 대항하려 했다. 그 때문에 다양한 대의들이 공통의 적에 대항

해 단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무엇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던 울분을 표현했다.

이 운동은 노동자 대중이 체제의 실패를 초래한 게 아니라 체제가 노동자 대중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운동의 성장은 중요한 논쟁들을 제기했다. "제시될 수 있는 대안과 그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동원하는 데 필요한 전술, 그리고 이 쟁점들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더 넓은 체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 논쟁해야 할 문제들이다."

지난 1월에 북막스에서 출간된 《저항의 세계화》는 반자본주의 운동과 그 운동을 둘러싼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소개된 반세계화 서적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 책만의 장점이다.

이 책의 저자들인 크리스 하먼과 존 리즈는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B)의 지도적 활동가들이자 반자본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다.

크리스 하먼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성장을 분석한다. 그리고 운동의 성장이 불러 일으킨 매우 중요한 논쟁들을 다룬다.

WTO 폐지를 둘러싼 논쟁, 미국 산업별노동총동맹(AFL-CIO)이 제기한 '사회적 조항'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 외채 탕감이라는 단일 쟁점을 고수하자는 쪽과 의제를 확장해 더 넓은 체제의 문제들을 다루자는 쪽 사이의 논쟁, 빈곤·개발·생태 파괴를 둘러싼 개발주의자와 환경주의자 사이의 논쟁 등.

하먼은 각각의 논쟁을 다룬 뒤에 이렇게 평가한다.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수전 조지, 월튼 벨로, 피에르 부르디외, 나옴 클라인, 만다나 시바, 캐빈 대너허 등)

은 신자유주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들은 체제가 전 세계를 파멸시키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때는 모순적 입장을 취한다.

특히 변화의 주체 문제가 그렇다. 예컨대, 월튼 벨로는 제3세계 정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를 대안으로 삼는다. 수전 조지는 기존 국가에 압력을 행사해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활동가들은 농민이나 비정부기구(NGO)를 변화의 동력으로 여긴다. 그들 모두는 대체로 노동 계급이 사회 변화의 핵심 세력임을 놓치고 있다.

존 리즈는 세계적 차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영국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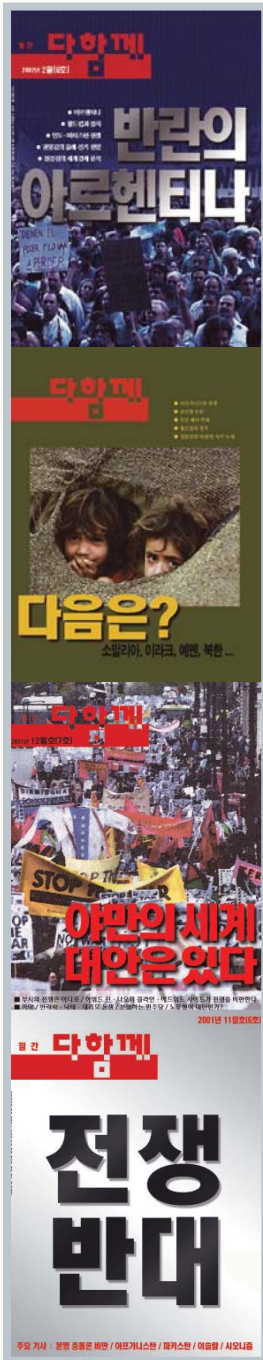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 초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 투쟁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리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영향, 개량주의의 위기, 영국 산업 투쟁의 상태를 분석한다. 또, 사회주의자들이 새로운 개입주의를 위해 활동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영국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좌파들이 활동하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만한 글이다.

특히, 공동선전, 선거,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활동 방식 모색 등은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하다.

《저항의 세계화》는 운동 초심자들에게는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제1장 IMF, 세계화 그리고 저항'은 기초 지식 없이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을 건설하고 조직하는 활동가들은 꼭 읽어 봐야 할 책이다.

김인석



6호(2001. 11)

- 김대중은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 아프가니스탄
-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이유
- 전쟁, 거짓말 그리고 언론
-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들
-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의 반전 성명서
- 전쟁에 대한 사회 변화자들의 태도
-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 일본의 군사대국화
- 부패-자본주의의 만성 고질병

9호(2002. 2)

- 저들의 세상 우리의 세상
- 패륜주의를 넘어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월드컵과 정치
- 김대중과 검찰 부패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2002년 선거 전망
- 철도 사유화 반대 투쟁
- 정성진 교수의 세계경제 위기전망
- 지금의 아르헨티나 상황
-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의 교훈
- 양심적 병역 거부
- 노무현은 민주 개혁가인가
- 주5일 근무제

8호(2002. 1)

- 이스라엘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 끝없는 전쟁?
-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해방됐는가?
-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 보신탕 논란
- 인간 배아복제
- 백색 공포?
- 월드컵, 스포츠, 자본주의
- 김대중, 선거, 진보 진영의 도전
- 강준만의 '비판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
- 철도 노동자 투쟁
- 현재의 재외동포법 위험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
- 브뤼셀 EU 정상회담 반대 시위
- 중국은 어디로?
- 크리스마스의 해방

7호(2001. 12)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세 분석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인/에드워드 사이드
- 미국 정부의 생화학 테러
-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 봉기
-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 전쟁과 근본적 사회 변혁
- 집권당의 위기, 대안은 무엇인가
- 파산한 김대중 '개혁'의 전도사 노무현
- 구로울/동대문을 선거 활동 평가
- 현재의 간통죄 합헌결정
- 수전 조지의 WTO 비판
- 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가
- 철도 노동자들의 사기업화 반대 투쟁
-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 의사들의 안락사·낙태·대리모 지침
- 사형을 폐지하라
- 네그리의 《제국》비평
- 김대중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비판
- 교사들은 왜 7차 교육과정안을 반대하는가
- 일본 경제위기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갈릴갈에 선 파키스탄

• 유엔

- 유대 시오니즘의 본질
- 세계화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 출입국 규제를 철폐하라

5호(2001. 10)

-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정책
- 미국 정부가 최대의 테러리스트
- 오사마 빈 라덴
- 탈레반
- 이슬람 근본주의
- 테러리즘 비판
-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가는가
- 김수행 교수 강연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 시장이 낳은 주택대란

4호(2001. 9)

-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 민주노동 수배 간부들의 자진 출두 이면
-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
-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 제노바 G8회담 반대 시위
- 가톨릭 급진주의의 죽음인가?
- 소련 붕괴 10주년
- 부시의 MD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
- 아르헨티나
- 메가와티의 불안한 앞날

3호(200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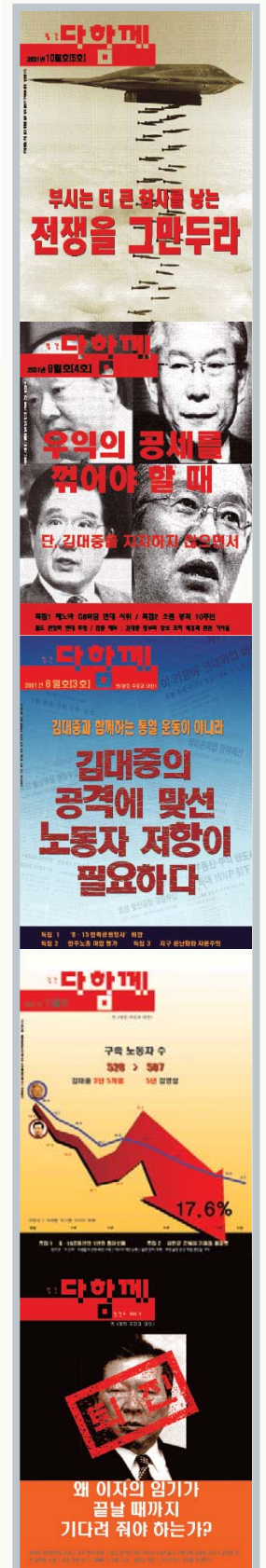
- 김대중 언론개혁의 모순
- 모든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라
- 헬렌 켈러
-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판한다
- 민주노동 상반기 파업평가
-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 글리벡 가격을 인하하라
- 매대춘 합법화
- 부시 행정부 6개월 평가
- 제노바 G8 정상회담 반대시위
- 이스라엘: 중동 전쟁의 화근

2호(2001. 7)

- 심화되는 정치위기
- 서울대 개혁논란
- 인력사 합법화 논쟁
- 〈인〉지의 모호한 김대중 퇴진론
- 모성보호법 - 후퇴없이 즉각 개정해야
- 6.15공동선언 1년을 돌아보며
- 새만금 간척이 가져올 결과들
- 민족과 계급
- 적동의 인도네시아
-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1호(2001. 5)

- 켈백의 반자본주의 시위
- 무기 살 돈을 의료비로 돌려라
- 미친 스타 위즈 계획을 중단하라
-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 부시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
- 미스코리아 대회 - 여성 차별 축전
- 계속되는 경찰 폭력 위험
- 경찰은 왜 그리도 폭력적일까?
- 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 일본 사회의 양극화와 역사 교과서 왜곡



공개토론회

2002. 3. 14. 목

오후 6:30

고려대학교

주최/다함께

2002년 봄 새내기 맞이 공개토론회

미국, 보수 정당, 보수 언론

연사: 손석준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